



---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8~2022



##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 ※ 배경색 : 중점과제

정책목표		
추진과제		담당부서
세부사업		
<b>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b>		
1-1	<b>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b>	
	①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가족담당관
	②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보육담당관
1-2	<b>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b>	
	① 대안교육기관 연계 지원 강화	청소년담당관
	②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청소년담당관
1-3	<b>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b>	
	①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청소년담당관
	② 위기청소년 공공의료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1-4	<b>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b>	
	①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연령, 직종, 성별)	노동정책담당관
	② 청소년 노동권리홍보 (연령, 직종, 성별)	노동정책담당관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1-5	<b>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b>	
	①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	여성정책담당관
	②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여성정책담당관
	③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④ 몰래 카메라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1-6	<b>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b>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가족담당관
	②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가족담당관
	③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미혼모) 생활코디네이터	가족담당관
	④ 미혼모(한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담당관
1-7	<b>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b>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어르신복지과
	② 치매지원센터 기능강화로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	건강증진과
	③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 지속적 확충	어르신복지과
1-8	<b>노인과 돌봄 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조성</b>	
	①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	어르신복지과
	②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어르신복지과
	③ 돌봄 노동자 및 어르신 인권교육	어르신복지과
1-9	<b>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b>	

	① 민간쉘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위기사문화 가족 안전망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	<b>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b>	
	①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②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1-11	<b>북한이탈주민의 복지사각지대 지원</b>	
	① 취업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자치행정과
	② 서울의료원 연계 치과 진료 지원	자치행정과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정 심리상담 지원	자치행정과
1-12	<b>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b>	
	①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③ 발달장애인 개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장애인자립지원과
1-13	<b>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취약 근로자 보호</b>	
	①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노동정책담당관
	②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정책담당관
	③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노동정책담당관
1-14	<b>상생협력 대책 마련</b>	
	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공정경제과
	②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 진행	공정경제과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공정경제과
1-15	<b>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b>	
	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②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과
1-16	<b>이주배경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정착생활 지원</b>	
	①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기관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b>2.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b>		
2-1	<b>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b>	
	① 주택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주택정책과
	② 주거복지센터 1자치구 1센터 설치	주택정책과
2-2	<b>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b>	
	① 임대차 관련 월스탑 서비스 제공	주택정책과
	②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주택정책과
2-3	<b>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b>	
	①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정경제과
	③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담당관
2-4	<b>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b>	

	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②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한 입주지원대책 수립	임대주택과
<b>2-5</b>	<b>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b>	
	① 탈시설 민관협업체 구성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탈시설 정보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③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b>2-6</b>	<b>무장애 도시공간 조성</b>	
	①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버스정책과
	②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정책과
	③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정책과
	④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도시공간개선반
<b>2-7</b>	<b>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b>	
	① 재난약자를 위한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	상황대응과
	②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상황대응과
	③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b>2-8</b>	<b>환경오염을 고려한 시민환경권 증진사업</b>	
	① 시민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기정책과
	② 도시 가로수 확충 및 녹지조성 확대	조경과
<b>3.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b>		
<b>3-1</b>	<b>성평등 문화 확산</b>	
	①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추진	여성정책담당관
	②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b>3-2</b>	<b>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b>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담당관
	②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인권담당관
<b>3-3</b>	<b>인권자료 및 인권도시 공간 발굴</b>	
	① 인권관련자료 개발 및 수집 제공	서울도서관
	② 인권도시공간 발굴	인권담당관
<b>3-4</b>	<b>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b>	
	① 문화통합이용권	문화예술과
	② 공공도서관 확충	서울도서관
	③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문화예술과
<b>3-5</b>	<b>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b>	
	①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인권담당관
	②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인권담당관
<b>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b>		
<b>4-1</b>	<b>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b>	
	① 인권센터 설치	인권담당관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담당관
	③ 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담당관
<b>4-2</b>	<b>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b>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인권담당관
	② 인권실태조사 추진	인권담당관
<b>4-3</b>	<b>인권 도시 연대 강화</b>	
	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인권담당관
	② 광역지자체인권도시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인권담당관
	③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구축	인권담당관
	④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인권담당관
<b>4-4</b>	<b>인권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확대</b>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담당관
	②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인권담당관
	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인권담당관
	④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인권담당관
	⑤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인권담당관
<b>4-5</b>	<b>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치 거버넌스</b>	
	①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치행정과
<b>4-6</b>	<b>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b>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	가족담당관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b>4-7</b>	<b>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b>	
	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정보공개정책과
	②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데이터센터
	③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b>4-8</b>	<b>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교육 강화</b>	
	①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개설	서울시립대
	②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서울시립대

# **1. 시민의 생활인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맞벌이,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 다양한 보육수요 지속적 증가
- 시설보육 외의 가정 내 1:1 개별 보육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동육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존재함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도 보호자의 병원이용, 긴급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운영 및 수요자의 실제 이용에 여러 한계가 있음

- 기대효과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통한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 돌봄 기능 보완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 □ 사업 계획

### ① 아이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25개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17년 690,000건 → '18년 700,000건)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17년 350명 → '18년 400명)

####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대상,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육아정보나눔 기회 제공
- 10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동대문, 서대문, 동작, 관악, 강남, 도봉, 노원, 영등포, 서초, 중랑구)에서 17개소 운영 중
-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2018년 16개 자치구, 23개소로 확대 운영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125,735	21,899	23,403	25,040	26,762	28,63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양성수	2,090	400	400	420	420	450	
	소요예산	123,554	21,485	22,989	24,598	26,320	28,16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출산장려팀					
	담당자		하성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나눔터수	25	23	23	24	24	25	누계
	소요예산	2,181	414	414	442	442	46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출산장려팀					
	담당자		윤지원					

### ②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 운영 확대**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영아
- 이용시간 : 월~금 09시~18시
- 이용방법 : 아이사랑보육포털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 보 육 료 : 시간당 4천원
  - ※ 지원내용 : 기본형 2천원(월40시간), 맞벌이형 3천원(월80시간)
- 운영현황 : 70개소 89개반

○ **시간연장 어린이집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

- 소규모 운영 및 기존 교사 연장근무를 통한 시간 연장 서비스는 통합 운영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16,230	2,709	3,005	3,303	3,601	3,612	
시간제보육	반수	100	70	80	90	100	100	누계
	소요예산	12,575	2,001	2,286	2,572	2,858	2,858	
시간연장보육	반수	325	305	310	315	320	325	누계
	소요예산	3,655	708	719	731	743	75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팀		보육사업팀					
	담당자		최현영					

## 현황 및 문제점

- '16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학생 975,589명 중 학업중단 학생은 11,144명(1.1%)임
  -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16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36.9%이며, 학업중단 학생 중 70%가 고등학교 시기 발생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사각지대로 몰릴 위험이 있음
-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밖으로 숨어버리는 특성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현황과 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종합 발굴 지원체계에 의한 유관기관(학교, 경찰, 검찰 등) 간 지속적 연계 발굴 및 맞춤형 지원망 구축이 필요함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후에도 사회적 포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1차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대안교육' 경험 제공 중심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에 대한 '포용'과 보다 광범한 인권 증진 체계 구축에 집중
- 기대효과
  -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여건 조성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 ① 대안교육기관 연계 지원강화

### ○ 사업개요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료 전액 지원

###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 청소년 약 150명

- 전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978명 중 취약계층 132명 ('17년 2월 기준)

※ 취약계층 수업료를 기관 재량으로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기관에 불과

###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는 평균 연 1,670천원 수준 (무료 ~ 연 최대 900만원)

### ○ 지원방법 : 기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외 취약계층 학생 수업료 추가 지원

- 대상 선정 후 청소년 수업시행 확인 후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수업료 입금

### ○ 소요예산 : 250,500천원 (대안교육기관 평균 수업료 연 1,670천원 × 150명)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대안교육기관 연계·지원	지원대상(명)	1,250	150	200	250	300	350	
	소요예산	2,089	251	334	418	501	58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상담팀					
	담당자		석상우					

## ②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 사업개요

- 지역 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 운영체계

- 발 견 :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거리상담, 경찰서, 학교 등
- 개 입 :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심리검사, 전문상담사 및 청소년 동반자 개입
- 통합서비스 제공
  - 가출 : 일시보호소 보호, 가정·사회복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인터넷 중독 :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사업 운영
  - 경제적 지원 : 생활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

### ○ 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시설 등

###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립1, 구립24)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CYS-NET 운영	운영기관(수)	25	25	25	25	25	25	누계
	소요예산	13,300	2,600	2,630	2,660	2,690	2,72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상담팀					
	담당자		석상우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 발생

※ '10년 대비 위생용품 가격 평균 25.6% 인상('16.4월 기준,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10.6% 상승, 통계청)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2016년 '깎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

## ○ 기대효과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사업 계획

### ①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사업목표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추진방향 :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들이 낙인감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지속적·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 2022년(5년)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여성 위생용품 구매비용(1인 연 12만원 내외)
- 지원방법 :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한 지원(바우처 시스템 구축기간 '18년 상반기 동안 현물지원)
- 소요예산 : 10,347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위생용품 지급	지원대상(명)	86,000	11,000	15,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	10,347	1,347	1,800	2,400	2,400	2,4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권리팀					
	담당자		윤재호					

## ② 위기 청소년 공공의료 강화

○ 사업개요

- 서울시립청소년 건강센터 홍보 및 운영 지원
  - 위기 십대여성 대상 의료,심리상담,교육,기초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25개 자치구 250개 소녀돌봄약국 운영지원 통해 지역돌봄 강화
  - 일반의약품지원 및 건강상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4,239	798	821	848	873	899	
시립청소년 건강센터 운영	이용인원	56,000	10,000	11,000	11,000	12,000	12,000	
	소요예산	4,170	786	809	833	858	884	
소녀돌봄약국	이용인원	2,150	400	400	450	450	450	
	소요예산	69	12	12	15	15	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늘푸른여성팀					
	담당자		윤나래					

## 1-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청소년 노동자 증가 추세로 전체 아르바이트 인구 총 101만명 중, 청년 및 청소년 60만명 차지('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1차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서울의 규모와 특성에 걸맞는 지원책 수립이 필요

#### ○ 기대효과

-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 사업계획

---

#### ①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연령, 직종, 성별)

---

#### ○ 사업개요

-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특성상 시기별, 업태별, 지역별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므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 실태조사 추진

#### ○ 사업내용

- 격년 단위 아르바이트 일반적 조사와 매해 언론 및 외부기관 관심사례를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소요예산	50	10	10	10	10	1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권익개선팀					
	담당자		노이안					

## ② 청소년 노동권리홍보 (연령, 직종, 성별)

○ 사업개요

-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안내 및 노동권리를 홍보하여 근로인식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을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배포
-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 특성화고, 일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립청소년시설 등에 배부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노동권리홍보	청소년노동권리수첩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소요예산	100	20	20	20	20	2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권익개선팀					
	담당자		노이안					

###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 사업개요

-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추진

○ 사업내용

-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SNS 적극 활용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상담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지정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활용
  -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서 아르바이트 노동권 홍보, 피해접수/상담,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권리구제 및 상담	건수	1,000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	비예산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권익개선팀					
	담당자		노이안					

※ 권리구제 및 상담은 민간위탁(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체계도 부족
  - 데이트폭력은 지속적이며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특성이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인해 폭행죄 신고시 애정문제로 치부하는 등 신고접수조차 쉽지 않은 실정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성범죄가 증가하고 매체를 통한 피해의 정도가 기존 범죄이상으로 심각
  - 핸드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10년간 39배 증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 수준으로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

범죄발생건수	연 도	2005	2010	2015	비 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341	1,153	7,730	10년간 39배 증가
	비 율	3.0%	5.6%	24.9%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	164	1,031	1,139	10년간 7배 증가
	비 율	1.4%	5.0%	3.7%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6 범죄분석」>

- 피해자는 영상물 유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법적근거 미비, 정보부족 등으로 피해대응에 어려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강력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
  -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립 필요
- 기대효과
  -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시민 인식개선
  - 여성 스스로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안심 환경 구축

## □ 사업계획

## ①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

- 사업대상 : 일반시민
- 사업내용
  - 일반시민대상 권역별 현장 토크쇼 및 길거리 계도활동
  - 동영상, 웹툰 등을 페이스북, 전광판 등 가용매체 게시 및 배포
- 추진방법 :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인원(명)	2,50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250	40	45	50	55	6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복지팀					
	담당자		이계원					

## ②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 사업대상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상담전용콜 운영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매뉴얼 보급 및 종사자 교육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삭제, 의료 및 법률지원
- 추진방법 :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지원간수(건)	4,500	800	850	900	950	1,000	
	소요예산	450	80	85	90	95	1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복지팀					
	담당자		이계원					

### ㉓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 사업현황(’17. 10월 현재)

- 개념 :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우리시 정보인프라(CCTV·통합관제센터 등)를 활용 24시간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모델



- 주요 제공 서비스

- 1) 긴급상황신고 서비스 : 위급상황 위치정보기반 지도정보서비스를 이용으로 현장대응 및 112신고 등 서비스로 위기극복 지원
  - 2) 안심귀가 서비스 : 위험이 예상 또는 감지되는 구간으로 이동시 안전귀가 관제서비스를 제공
  - 3) 스카우트 서비스 : 심야에 서울시 안심스카우트 대원과 동행, 안전한 귀가위한 만남 지원
- 제공지역 : 4개 자치구(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 시범사업 추진 중(’17. 5. 2부터)

○ 서비스지역 확대 : 4개 자치구 → 서울시 전역(’18. 6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획		시범사업(자치구4)	성과분석 및 확대 (자치구10)	확대(자치구11)
내 용	본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이 앱개발</li> <li>▪ 안심이 통합플랫폼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플랫폼/앱 보완</li> <li>▪ GIS 서비스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 확대</li> </ul>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관제센터 연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관제센터 연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관제센터 연동</li> </ul>
소요예산		544백만원	1,101백만원	1,140백만원

- 시행주체를 자치구 주관에서 서울시 주도로 변경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추진
  - 전 자치구 일괄 구축 및 전면 확대를 위해 장기 계속계약 추진 (3단계 → 2단계)
  - 행정절차, 품질, 유지관리, 운영 등 유리하므로, 시 주관 사업 시행
- 실제 동시 상황 발생 시 동시/순차적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 지도에 안심이 기능 구현 추진 → 향후 위치기반 IoT 사업인프라 활용

○ 서비스 내용의 확대 : 개별적 여성안심서비스의 통합 제공 추진

-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다양한 여성안심 콘텐츠 확보 추진
  - 지도를 활용하여 사용자 위치 기반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정보 제공
  -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대처방법 등 각종 여성안전 정보 제공
  - 경찰청/이동통신사 등의 안전서비스와 연계 추진
- 위치기반 여성안전서비스를 치매노인, 어린이 등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 사물인터넷서비스와 연계하여 조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 사업내용 : CCTV 및 관제센터에 스마트폰 앱 연계, 위기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역 확대 : 4개 자치구('17년) → 서울시 전역('18. 5월)
- 서비스 내용 확대 : 위급상황 신고, 안심귀가 → (추가)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 기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여성안심 서비스를 스마트망을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시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안심이 구축확대	구축 자치구(개)	25	25	25	25	25	25	누계
	소요예산	2,740	1,140	400	400	400	4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정책기획팀					
	담당자		김성룡					

#### ④ 몰카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현황

- 사업목적 :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지하철역사 및 공공청사, 민간개방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도모
- 운영인원 : 50명 (자치구별 2명)
- 근로조건(4대보험 가입)
  - 임 금 : 월1,103천원/인 (시급 7,800원, 식비 포함, 출장비 별도)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 여성안심보안관의 역할 : 몰래카메라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추진계획 : 여성안심보안관 50명 → 100명으로 확대 추진

- 점검인원 확충, 민간시설 점검 확대하여 여성 안심생활권 확대
  - 정기점검 : 공공청사 및 지하철 역 화장실,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시·산하기관 공연장 및 수영장 탈의실 등
  - 시민을 대상으로 점검 대상지를 접수(홈페이지, 이메일)받아 민간 개인공간까지 확대
- 설문조사('17. 11) 분석 결과를 2018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개선
  - 분야별(사업효과, 근무여건, 홍보, 교육, 탐지장비, 점검활동) 분석결과 반영
  - 탐지기 민감도 개선 및 남녀 공용 화장실 등으로 점검대상 확대 등

- 육안점검 시 적외선 점검 장비 추가 도입하여 탐지효율 개선 및 교육 강화
- 경찰 입회 점검 시 민간 공용화장실 확대 점검 추진
-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 숙박업소 점검 방안 강구

-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대상지역 : 주요 거리, 영화관, 카페 대학가, 지하철 등
- 주요내용 : 고정설치 은닉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한 불법 도촬 등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여성폭력 예방수칙, 협박 대응수칙, 신고 및 대응방법 등

○ 몰카 프리존 조성 및 몰카 불안감 해소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 점검대상을 다수이용 민간시설(대학교 등)로 확대하고 인식개선 현장제도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점검횟수(회)	3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소요예산	8,439	1,489	1,500	1,650	1,800	2,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정책기획팀					
	담당자		김성룡					



## □ 실태 및 현황

- 이혼, 사별, 배우자로부터 유기·폭력 등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 317,607명('05년) → 351,848명('10년) → 411,465명('15년)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배우자 상실에 따른 정서적 안정과 주거 마련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필요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현재 한부모자립지원강화 과제는 주로 자녀 돌봄, 보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자립지원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정책에서는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 주거안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한부모, 미혼부/모, 조부모 양육 등 한부모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편견이 가장 심한 미혼모에 대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 사업계획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저소득 한부모지원 사업 :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등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편견의 극복을 돕고 자녀 양육을 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교육비 및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지원수(명)	143,120	25,902	27,197	28,556	29,983	31,482	
	소요예산	147,596	26,630	28,066	29,469	30,942	32,48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가족지원팀					
	담당자		박지병					

### ②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종합지원
  - 다문화, 부자가족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자립지원
  - 미혼모가정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부모교육, 집단상담 등)
- 한부모가족의 자립단계 및 생활영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 시설종사자의 업무향상 교육 및 시설 운영컨설팅 등 안정적 운영 지원
- 시설 생활인의 상담·치료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가족관계 개선 도모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지원건수(명)	72,000	14,000	14,200	14,400	14,600	14,800	
	소요예산	6,391	1,204	1,240	1,277	1,315	1,35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가족지원팀					
	담당자		김덕경					

### ③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미혼모) 생활코디네이터

○ 추진방법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활동

-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및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통합적 정보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해 미혼모(한부모)의 자립지원

○ 사업비 : 40백만원

-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 40백만원(민간위탁금)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한부모(미혼모) 생활코디네이터	지원건수	3,500	500	600	700	800	900	
	소요예산	240	40	44	48	52	5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가족지원팀					
	담당자		김덕경					

#### ④ 미혼모(한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추진방법

- 미혼모(한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 대시민 홍보 추진

○ 주요내용 : 한부모(미혼모) 인식개선 교육 등

- 공무원 대상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2회) 및 찾아가는 교육(수시) 실시
- 미혼모(한부모) 서비스지원에 대한 주민센터 비치용 안내지 제작·배포

○ 사업비 : 30백만원

- 미혼모(한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미혼모(한부모) 인식개선 홍보	홍보건수(명)	700	100	120	140	160	180	
	소요예산	200	30	35	40	45	5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팀		가족지원팀					
	담당자		김덕경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노인층 빈곤문제 해결 시급
  - '14년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노인빈곤율이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저소득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5년 47.7%로 심화되었으며,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음(OECD 평균의 4배 수준)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예상
  - '16년 130만명(전체 인구의 12.6%), 치매환자 13만명(10%)으로 추정
  - '30년 210만명(전체 인구의 22.3%), 치매환자 21만명(10%)으로 증가 예상
-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1, 자치구 25) 등 선도적 정책추진으로 조기검진 및 치매군 관리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나 국비지원 전무
  -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조기검진율 : 7%('08년) → 21%('16년)
  - 조기검진으로 인한 '치매군' 발견 및 관리율 6%('15년 전국평균 2.1%)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어르신과 주변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경우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관리가 효과적
  - 치매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율 80% 수준으로 감소 및 중증도 감소 가능하며,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로 연간 요양비용은 5,174억원 절감 추정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르신 선제적 발굴·지원 강화
  -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예방·발견·치료 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에서 자유로운 안심도시 서울 구현

□ 사업 계획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86명)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초고령 독거, 고령자 부부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50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기간 : 2018. 1. ~ 12.

-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 생활 수급대상 제외에서 제외된 어르신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내용 : 노인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방법 : 지원대상 어르신에 대하여 자치구를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 시비지원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기간 : 2018. 1. ~ 12.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판정을 받은 자

- 내용 :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선납) 전액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바우처 지원액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중위소득140%~160%이하	290,520 (100%)	224,520원(77.3%)	66,000원(22.7%)
	중위소득110%~140%미만		238,520원(82.1%)	52,000원(17.9%)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 110%미만		253,520원(87.3%)	37,000원(12.7%)

	차상위계층		272,520원(93.8%)	18,000원(6.2%)
	기초수급자		290,520원(100%)	무 료( 0% )
월 36시간	중위소득140%~160%이하	387,360원 (100%)	299,360원(77.3%)	88,000원(22.7%)
	중위소득110%~140%미만		317,360원(81.9%)	70,000원(18.1%)
	차상위초과 ~ 중위소득 110%미만		338,360원(87.4%)	49,000원(12.6%)
	차상위계층		363,360원(93.8%)	24,000원(6.2%)
	기초수급자		379,080원(97.9%)	8,280원(2.1%)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수(명)	736	136	150	150	150	150	
	소요예산	690	122	142	142	142	14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담당팀		돌봄시설팀 요양보호팀					
	담당자		이원조,김영일					

## ② 치매지원센터 기능강화로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개구)
- 추진방향 : 기존 서울치매지원센터의 ‘치매안심센터’로 기능 확대

구 분	변경 전	+ 신규 및 확충
시설현황	- 광역치매센터 1개소 - 지역치매지원센터 25개소	유지
인력 및 예산 확충	- 자치구별 인력: 11명 - 자치구별 운영예산: 4~5억원 (지방비 100%)	- 자치구별 인력: 15명 - 자치구별 운영예산: 1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주요기능	- 치매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등 - 치매치료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 치료비지원, 가족교육, 자조모임 운영 - 치매종사인력 교육 및 연구 등	- 경증 치매관리 위한 ‘기억키움학교(단기 쉼터)’ 확대: 14개소(17년) → 25개소(18년) - 치매가족 지원 위한 ‘치매가족카페’ 설치 - 시민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 ‘우리동네 안심주치의’ 제도 운영 등

###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등록관리 강화로 사각지대 어르신과 가족 발굴 및 관리
- 치매중증화 지연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지건강프로그램, 집중사례관리 등)
- 경증 치매환자 관리 위한 기억키움학교 및 가족 지원 위한 치매가족카페 설치 확대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 위한 홍보 강화 등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치매안심도시 구현	센터수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누계
	소요예산	20,725	27,500	28,462	29,458	30,489	31,55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당팀		치매관리 TF팀					
	담당자		조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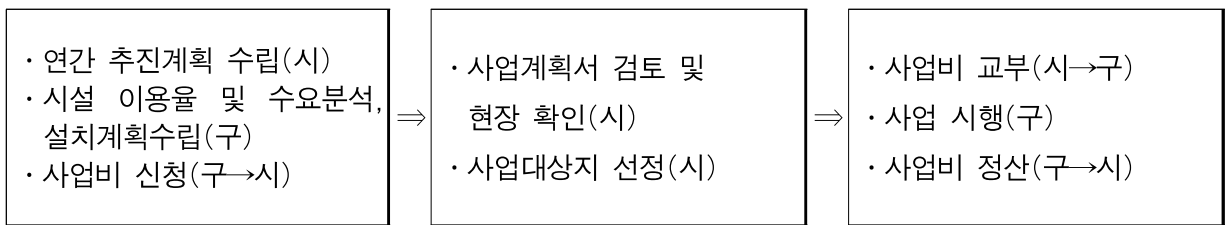
### ③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지속적 확충

#### ○ 사업개요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목표 : 공공성을 확보한 돌봄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복지 및 부양부담 경감
- 추진방향 : 지역실정 및 요양수요에 적합한 설치유형 발굴 지원

#### ○ 사업내용

- 기간 : 2018 1. ~ 12.
- 내용 : 치매·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성질환 어르신 대비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으로 설치비 지원,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절차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 지속적 확충</b>	개소수	368개소	328개소	348개소	368개소			누계
	소요예산	9,900	3,300	3,300	3,300	※요양수요 계측에 따른 확충목표 별도마련		
<b>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b>	담당팀		요양보호팀					
	담당자		최문선 2133-7419					

## □ 실태 및 현황

- 낮은 임금수준, 고용의 불안정성, 이용자(보호자)의 과도한 요구·폭행 등으로 신체적·심리적 고충이 있는 어르신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 절실
  - 돌봄종사자 고충사례 (17.7~8월 복지본부 현장방문시 전문가·요양보호사 등 의견경청)
    - 고용·임금 : 어르신 사망, 이용서비스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일자리 불안정, 낮은 임금
    - 성희롱·폭행 : 이용자 등의 성희롱, 보호자의 멸시, 폭언, 폭행 등
    - 부당 요구 : 이용 어르신 이외의 가족(보호자)의 청소, 세탁 등 과업외 요구 등
-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에 대한 업무 평가절하, 비인격적 대우 등 불합리한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필요
  - 돌봄서비스가 대부분 1:1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업무의 중요도와 숙련도가 간과됨으로써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저조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돌봄노동자는 돌봄 수혜자 어르신의 취약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고용인으로 인식되어,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
  -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필연적이므로, 돌봄 수혜자 어르신과 돌봄노동자의 존엄성이 함께 존중받는 방안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어르신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어르신복지 시책 신뢰도 증가
  - 공공사회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사업 선정 ⇒ 전문성, 효율성·체계화된 표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종사자, 시설 운영자 편익 증대

□ 사업계획

**①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

○ 사업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 사업내용

- 기간 : 2018. 1월~12월
- 대상 :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 내용 : 건강증진·직무향상 등 역량강화사업, 고충상담·취업상담 등 권익보호사업 등 지원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및 쉼터 권역별 확충 운영

-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 권역별 2개소씩 8개소 추가 확충('17~'19)
  - 확충계획 : '17년 하반기 2개소(서북권 1, 서남권 1) → '18년 3개소(서북권 1, 서남권 1, 동북권 1) → '19년 3개소(동북권 1, 동남권 2)

○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

- 노인방문요양 등을 공단 사업으로 포함시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노인요양서비스 모델설계 →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 용역 → 조례제정 → 설립

※ 제1차 기본계획(2013~2017) 목표 달성 : 지원센터 확충계획(4개소)

- 서북권 1개소('13년) → 서남권 1개소('16년) → 동북·동남권 2개소('17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b>	개소수	센터-4개소 쉼터-8개소	센터-4개소 쉼터-5개소	센터-4개소 쉼터-8개소	센터-4개소 쉼터-8개소	센터-4개소 쉼터-8개소	센터-4개소 쉼터-8개소	누계
	소요예산	19,762	3,462	4,300	3,800	4,000	4,200	
<b>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b>	담당팀		요양보호팀	※ 센터 및 쉼터는 '20년부터 추가확충 없음				
	담당자		류미경					

**② 요양보호사 업무 및 정서를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 사업근거

-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심의 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 2017.12.8.)
-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 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과, 2016.12.22.)

○ 사업내용

- 기간 : 2018. 1월~12월
- 규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선발(21명)
- 연도별 선발인원 : '16년 12명 → '17년 21명 → '18년 21명(예정)

○ 요양보호사 업무 및 정서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 신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 기피대상자 돌봄 동행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병가, 산재 시)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하여 운영 ※ 뉴딜일자리 사업비 활용
  - [시 어르신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운영단체 공모 선정, 운영단체 관리 등
  - [시 일자리정책과] 사업대상 선정,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민간 운영 단체] 운영 세부계획 수립, 인력 선발 관리 등 사업실행, 사업결과보고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요양보호사 업무 및 정서를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선발인원	21	21	※ 뉴딜일자리 사업 선발결과에 따라 변동				
	소요예산	460	46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담당팀		요양보호팀					
	담당자		류미경					

### ③ 돌봄노동자 및 어르신 인권교육

○ 사업근거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 '18년 신규 추가사업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고유사업인 권익옹호사업 부분을 확대(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추가)함으로써 별도 예산 불필요

○ 추진배경

- 어르신돌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교육 필요

○ 사업내용

- 기간 : 2018. 1월~12월
- 대상 : 어르신 돌봄노동자, 서비스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돌봄 이용자(어르신 및 어르신 가족)
- 방법 :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교육 홍보기능 강화
- 내용 : 돌봄노동자 인권침해 사안 정보 공유 및 대응 등 사례관리, 수혜자 대상 홍보 및 개선 안내 교육체계 마련(홍보용 리플렛 등 활용 포함)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돌봄노동자 및 어르신 인권교육	교육횟수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누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담당팀		요양보호팀					
	담당자		류미경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4천명으로 총 인구 수(9백8십만)대비 4%이상을 차지
  - 이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335,167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음

〈출처 : '16.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단위 : 명〉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335,167명)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		
404,037	85,878	33,139	37,178	80,712	98,260	40,775	28,095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임시적 피난처 제공 필요
  - 폭력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이주민들에게 전문상담, 피해여성과 자녀에게 긴급 의식주를 지원할 필요
- 기대효과
  - 위기에 처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거소 및 의식주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존엄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 사업계획

### ① 민간쉘터 운영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 사업내용

- 거처불명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 쉘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 추진방법

- 민간 외국인주민·난민 쉘터운영 지원(3~4개소)
  - ※ 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외국인주민·난민 쉘터운영 단체(개소당 25~35백만원)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지원(3~4개 단체)
  - ※ 대상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단체당 20~30백만원)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민간쉘터 운영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인권보호 단체(개)	35	7	7	7	7	7	
	소요예산	1,000	200	200	200	200	2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담당팀		외국인주민 인권팀					
	담당자		최선아					

### ② 위기 다문화 가족 안전망 지원

#### ○ 추진방법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주민 상담원 및 다국어통번역단 운영을 통한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상시 가능 및 다국어통번역단을 통해 기타언어 예약 제공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긴급보호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상담건수	60,600	12,000	12,000	12,100	12,200	12,300	
	소요예산	1,540	350	368	380	400	4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담당팀		다문화가족팀					
	담당자		이신옥 2133-5082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내용

-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 추진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4개) : 한국어교육, 기본사업 및 방문교육, 특성화사업
-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6개) :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상담 등
- 글로벌센터 운영(3개 : 서울, 서남권, 동대문) : 생활지원(상담, 교육, 의료), 비즈니스 지원(상담, 교육, 창업), 커뮤니티공간 제공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93,749	17,618	18,167	18,732	19,315	19,917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상담건수 (건)	100,403	18,740	19,339	20,024	20,736	21,564	
	소요예산	63,270	11,917	12,275	12,643	13,022	13,41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담당팀		다문화가족팀					
	담당자		이신옥					
외국인근로자 센터 운영	상담건수 (건)	65,0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소요예산	8,353	1,574	1,621	1,669	1,719	1,77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담당팀		외국인주민 인권팀					
	담당자		최선아					
글로벌센터 운영	상담건수 (건)	2,751,000	501,000	525,000	550,000	575,000	600,000	
	소요예산	22,126	4,127	4,271	4,420	4,574	4,734	
글로벌센터	담당팀		운영팀					
	담당자		진희원 김은숙 신동훈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결혼, 난민 증가 등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수 지속 증가 [법무부, 2016]
  - 난민신청 1,574명('13) → 7,542명('16), 결혼이민자 150,865명('13) → 152,374명('16년)
  - 국내 거주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수 183,106('12) → 208,971('16)
- 의료 보장제도 사각지대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호제도 필요
  - 등록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률 24.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 서울 거주 외국인의 기본 생활환경 만족도 중 의료분야가 가장 저조
  - 의료(3.15) < 주거(3.39) < 문화(3.41) < 교통(3.93) ※ 5점 만점  
(서울 외국인 생활환경 조사 결과, 2014)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서울서베이, 2016]
  - 의사소통 40.4% > 비용 18.8% > 이용철자 8.6% > 거리 4.2% ※ 문제없음 28.8%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공공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필요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민 등 외국인의 의료접근도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계획

### ①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 추진근거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 자녀로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내용 : 입원 및 수술, 산전진찰 의료비 지원 ※ 총진료비의 90%지원(10% 본인부담)
- 방법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
  - ※ 지정 의료기관(12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북부병원, 성북중앙병원

○ 향후계획 :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 환경 실태조사('18년)

---

**②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사업내용

- 대상 :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내용 : 입원·치료 환자에 대한 중증도에 따른 간병서비스 차등 지원(최대21일)
- 방법 :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른 간병사 파견 및 통역서비스 지원
- 지원언어 : 영어, 몽골, 중국, 베트남어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이주민의 의료 건강권 확대</b>	의료지원건수	9,500	1,700	1,800	1,900	2,000	2,100	
	소요예산	12,730	1,546	2,046	2,546	3,046	3,546	
<b>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b>	담당팀		응급의료 관리팀					
	담당자		박송화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소유 임대주택 의존,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 의료비용 부담
  - 2016 남북하나재단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소유 임대주택 거주자가 77.6%
  - 소득 중 주거비용이 절반에 가까운 42.5% 차지, 월평균 생활비로 50만원 ~100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어 초과 진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4·50대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고, 약 48%가 서비스업 종사
  - 2016 남북하나재단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서비스 및 단순 노무 종사자가 47.7% 차지
  - 남한에서의 계층의식은 상류층(1.1%)에 비해 72.3%가 하류층으로 의식
  - 연령은 청·장년층 비중이 높고, 경제·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
  - 2015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응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0명 중 4명
  - ‘간첩, 정부지원으로 사는 사람들’ 등 탈북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으로 주민 통합 어려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하나센터 및 유관기관과 민관협력 활성화
  -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 서울시 기초생활물품 및 치과 치료, 심리 돌봄 등 의료 지원을 다양화
- 기대효과
  - 자립기반 마련 등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남북주민이 다함께 어울려 따뜻한 삶을 누리는 “함께 서울” 구현

## □ 사업 계획

### ① 취업교육 및 맞춤형 취업 지원

#### ○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7년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7호」
-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164」

#### ○ 추진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공공분야 채용을 통해 안정적 자립·자활 기반 마련
- 서울시-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 ○ 사업 분야

##### 가. 탈북 청년 푸드트럭 창업 지원

- 추진시기 : 연 중
- 지원대상 :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청년(만18세 ~ 만39세)
- 지원체계

서울시·자치구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홍보(자치행정과)</li><li>• 컨설팅, 자금융자(소상공인과)</li><li>• 영업장소 발굴(시·구)</li><li>• 기관협력체계 운영(자치행정과)</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상자 모집·선정</li><li>• 교육(음식조리, 영업 등)</li><li>• 차량지원(소유권 이전)</li><li>• 계약 및 운영관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내 탈북민 대상 홍보</li><li>• 대상자 모집 홍보, 발굴</li><li>• 민간자원연계 지원</li></ul>

## 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 추진시기 : 연 1회 이상
- 개최장소 : 시민청 등
- 운영규모 : 공공기관(서울·경기·인천), 민간기업체 등 30여개 단체
- 추진방법 : 수도권 지자체(서울·경기·인천) 및 남북하나재단 공동추진

## 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장터마당 개최

- 추진시기 : 연 1회 이상
- 개최장소 : 시민청 내 시민플라자 ※ 서울광장 등 야외장소 가능
- 참여대상 : 탈북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20여개 기업
- 판매품목 : 쌀, 잡곡, 꿀, 농산물 가공품, 가방, 의류 등 패션, 뷰티, 수공예품 등
- 추진방법 : 서울시-남북하나재단 공동추진

## 라. 북한이탈주민 취업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 교육기관 : 서울지역 4개 기술교육원 (동부, 중부, 북부, 남부)
- 교육과정 : 전기, 관광조리, 특수용접, 패션디자인, 소프트웨어, 자동차정비 등
- 모집시기 :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 추진방법 : 지역적응센터 연계, 관할지역내 지원자 발굴 및 신청 절차 지원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푸드트럭창업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사회적기업 장터마당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탈북민 취업교육지원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팀		행정관리팀					
	담당자		박재련					

## ② 서울의료원 연계 치과 진료 지원

### ○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7년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7호」

### ○ 추진 방향

- 서울의료원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신 건강 증진
- 서울의료원을 거점으로 하나센터와 협업하여 서울형 치과 진료 지원

### ○ 사업 개요

- 추진 시기 : 연 중
- 진료 대상 : 市 거주 12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추진 내용 : 치료비 지원 한도

구 분	전체틀니	부분틀니	보철 등 치료	비 고
지원한도액	400	300	150	1인 / 연간
(만원)	200	150	75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 진료 기관 : 서울의료원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치과 진료	명	1500	300	300	300	300	300	
	소요예산	1670	334	334	334	334	334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팀		행정관리팀					
	담당자		박재련					

###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정 심리상담 지원

○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7년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7호」

○ 추진 방향

- 북한이탈주민 가정 상담 수요를 발굴, 전문상담기관과 건강가정 워크숍 진행
-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이 발굴되면 전문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속 상담

○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정서적 불안정 해소 및 맞춤형 지원 파악
- 추진 시기 : 연 1회
- 추진 내용 : 심리치유 특강, 면담, 건강 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 기관 : 전문상담기관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심리상담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60	12	12	12	12	12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팀		행정관리팀					
	담당자		박재련					



## □ 현황 및 문제점

- 돌봄 부담으로 부모에게서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
  -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극적으로 탈출한 ‘만득이 사건’
  - 학대자 : 이웃 24.4%, 민간기관종사자 24.3%, 부모 9.4%, 형제자매 5.9% 등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생활권임에도 여전히 만족도가 낮음
  - 생활이동지원센터 콜관제시스템 교체, 이용요금 인하 등으로 장애인차량 콜처리율이 향상(48% → 73%)되었으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개선
- 자립생활 패러다임 변화로 뇌병변언어장애인 활동 증가, 의사소통의 대안 필요
  - 뇌병변장애인 70%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14%만 의사소통서비스 인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조사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
  - 생활이동지원 서비스 개선·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환경 조성 필요
  - 전문적·체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으로 생활 및 활동 불편 해소 필요
- 기대효과
  - 유형별 장애인 복지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

## □ 사업계획

### ① 장애인권센터 기능 확대

#### ○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 추진목표

-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재가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지원 확대

#####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조사권 강화

#### ○ 사업내용

##### - 추진내용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및 응급 보호·조치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 - 추진방법

- 장애인학대 업무 전담팀(변호사 1, 직원 2) 추가 구성·운영
-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관련 기관(해당 경찰서 및 자치구, 민간전문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강화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	사건처리 (건)	3,600	700	710	720	730	740	
	소요예산	4,410	865	875	885	890	895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담당팀		장애인권익 보장팀					
	담당자		황중섭					

## ②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 ○ 사업개요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 추진목표 : 발달장애인 정보문화 플랫폼 구축 운영
- 추진방향
  - 발달장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40,000명 이상
- 주요서비스
  - 국내외 발달장애 관련 단행본, 자료집·보고서, 음원자료, 사진·영상자료 수집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작
  - 발달장애 정보지 제작 및 배포, 발달장애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 온, 오프라인 자료를 열람, 대여, 복사할 수 있는 멀티콘텐츠 정보센터 운영 등
- 추진일정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18 ~ '21) : 발달장애인 전문기관(단체)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운영 기관 선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단계('22 ~ )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에 따라 발달장애인 플랫폼 사업은 가활센터에서 인수하여 운영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발달장애인 정보문화 플랫폼 구축운영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소요예산	2,000	400	400	400	400	4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복지정 책팀					
	담당자		김희영					

### ③ 발달장애인 가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 ○ 사업개요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 추진목표 : 전국 최초로 재활(再活)이 아닌 가활(可活)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

※ 가활이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함

####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지식·기술 복합복지센터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운영
- 복지·교육·일자리·의료·문화 분야를 총 망라하는 발달장애인 토탈서비스 제공

####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40,000명 이상

#### - 주요기능

- 발달장애인의 현재 능력 수준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활형 전문 프로그램 및 전용 도서관 설립
- 기존 사회 환경과 복지 종사자 인식을 자활에서 가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가활 정책 전문 연구 조직 설치
-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발달 장애인 관련 센터들을 가활센터에 집적

#### - 추진일정

-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발달장애인 정보문화 플랫폼 사업부터 '18년 우선 추진하고 가활센터 신축은 '18년 타당성 용역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운영			타당성용역	사전절차· 부지매입	설계 및 신축	센터운영	기능강화	
	소요예산	17,600	100	4,500	9,000	2,000	2,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복지 정책팀					
	담당자		김희영					

### ④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 사업개요

-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생활권임에도 여전히 만족도가 낮아,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한 콜 처리율 향상(72.6%→80%)
- 보람일자리 파트타임 운전원 운용 효율화
-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앱 개발로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44분→40분)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상담원 성과포상제 운영개선
- 종사자 복무규정 및 이용자 규칙 개정
-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2,000→3,000여명 이상 확대)
- 바우처택시 기사의 장애인 안내서비스 교육 강화로 이용편의성 향상

※ 바우처택시 : 일반콜택시를 통한 승·하차 (일 2회 · 월 20회 / 택시요금의 65%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콜처리율 향상	콜처리율 (%)		80%	81%	82%	83%	84%	
	소요예산	83,000	13,400	15,600	16,800	18,000	19,20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팀		재가복지팀					
	담당자		박기용					

## □ 현황 및 문제점

-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증가한 기간제,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정책 강화 요구
  -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개입과 해결필요
-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형 노동정책 수립·시행요구 증가
  -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수행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서울지역 노동현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책 영역활보 필요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9,366명(시 본청 및 사업소 1,918명, 투자출연기관 : 7,48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12년~’18년 2월 기준)
- 노동조건 개선은 서울의 당면문제 뿐만 아닌 세계적 흐름
  - 생활임금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추진 필요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
  - 이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임.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서울시가 보유한 권한 및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국가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 보호에 기여

## □ 사업계획

### ①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 추진대상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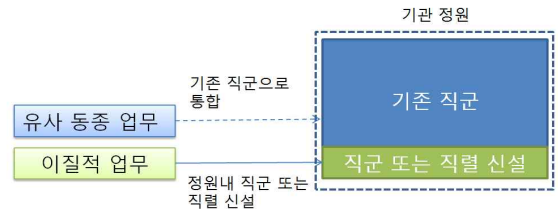
○ 추진방법

① 정규직 유사·동종업무 : 기존 직군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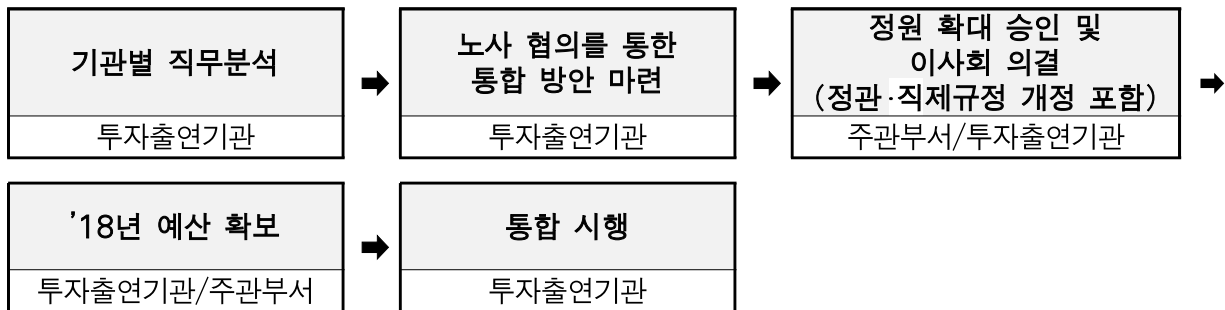
- 기존 직군의 급여체계 및 후생복지 적용

② 이질적 업무 : 별도 직군·직렬 신설

- 급여체계 및 후생복지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 추진절차



○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비정규직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

※ 잔존 비정규직 중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검토 후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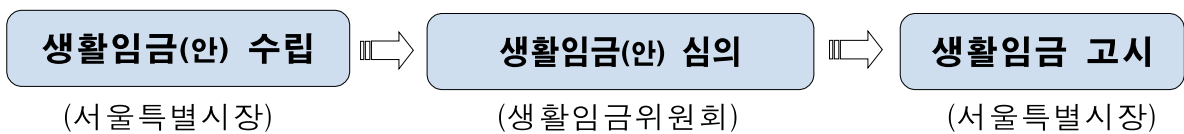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명	2,442	2,422					
	소요예산	12,996	7,653	1,191	1,718	1,210	1,22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노동정책팀					
	담당자		한선희					

### ②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 ○ 생활임금 개요

- 생활임금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방법 :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두 월액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결정절차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생활임금(안)을 심의후 시장이 고시



※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 생활임금 연차별 인상 추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145원	8,197원	9,211원	10,000원대	10,000원이상

## ○ 공공기관 생활임금 확대 마무리

-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약 11,500명 적용)

시 투자출연기관	· '15년 적용 완료(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 '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 적용 유예된 시설관리공단 및 다산콜센터 '17년 적용 완료
자회사	· '17년 적용(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 '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 생활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 검토

- 시 직접일자리 사업, 시·구비 매칭사업 근로자 등

-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 추진

-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필요



※ 현재 국회 상임위에 개정안 계류중으로 새정부 공약 사항 기반영

○ 기업 등 민간기관 생활임금 확산

-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확산 유도

입찰계약	•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각 +2점, '17.1월~)
기업인증	•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17.1월~)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1월~)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민간기업과의 MOU 및 전사회적 캠페인 전개 : 생활임금의 날 운영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생활임금 적용확대	생활임금액 (원)		9,211	10,000	-	-	-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노동정책팀					
	담당자		운영은					

## ③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 ○ 추진방향

- 주40시간-연간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 : 초과근무 감축, 미사용 연가 소진
-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우선 확충 : 채용비용 인건비 절감분으로 상쇄
  - ※ 증원규모는 생산성 향상(3%) 및 임금피크제 증원 인력 고려 산정
- 소득감소 충격 완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추진

### ○ 시범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단축 모델 시범 적용

<b>신용보증재단</b> (금융업계 및 사무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275시간 → 1,815시간'(△46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21년도 1,891시간 도달 전망</li> <li>- 1일 8근무시간 기준 58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0일 단축)</li> </ul> </li> <li>• '20년까지 4년간 총 27명('17년 10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li> </ul>
<b>의료원</b> (교대제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485시간 → 1,888시간'(△59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8근무시간 기준 75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2.5일 단축)</li> </ul> </li> <li>• '20년까지 4년간 총 60명('17년 15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li> </ul>

※ 서울의료원('17.5.1.), 신용보증재단('17.7.3) 채용완료 및 인력 투입

※ '17.12월말 인력 투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 검증 예정

### ○ 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의 확산 추진

- 노사 공동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 추진

<b>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저축제 시행(서울연구원)</li> <li>• 2~3주 장기집중휴가소진제(디자인재단)</li> <li>• 자기개발 등을 위한 3일 이상 휴가시 휴가비 지원(SBA)</li> </ul>	<b>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b>
<b>휴게시간 당당하게 보장받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등 특수형태근로자 휴게시간 일제점검·보장(주택도시공사)</li> </ul>	<b>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b>

-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모델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및 민간 확산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		노동정책팀					
	담당자		윤영은					

## □ 실태 및 문제점

-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증가
  - 가맹본부 2,973개, 가맹점 19만개(12) →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 22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 : 1,508건(12) → 2,433건(16)
- 편의점주 등 일부 가맹점주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지속제기
  -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으로 인한 건강·휴식권 침해문제 확산
    - 32시간 연속영업 사례, 명절·심야시간 의무영업 규정에 대한 간판불 소등운동 등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과제 필요성
  - 본사의 과열경쟁, 부실운영 등 대외 영업여건 악화로 가맹점주의 생존권 위협
  - 대등하지 않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및 제도점검 필요
- 기대효과
  - 상담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및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불공정거래 근절

## □ 사업계획

### 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 사업목표
  -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 사업개요

- 운영일정 : 방문상담(매주 金 09:00 ~ 18:00, 무교별관 3층), 온라인상담(눈물그만 게시판)
- 주요기능 : 불공정피해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지문,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 운영현황 : 총 937건 상담접수(13. 5월~17. 12월), 피해구제 지원 총 43건(15.~17.12월)
- 상담위원 : 총 19명(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기능 확대	상담건수	1,600	280건	300건	320건	340건	360건	
	소요예산	170	30	32	34	36	3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담당팀		공정거래팀					
	담당자		전미					

**②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 진행**

○ 사업목표

- 프랜차이즈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과도한 유통마진, 필수구입 물품 구입강제 등)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관련 정책변화 유인

○ 사업개요

- 조사분야 : 가맹점·대리점·유통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 ※ '13년 이후 총 7회(화장품/편의점/유제품/인테리어/대리점/필수구입물품/정보공개준수 실태) 실시
- 조사방법 : 방문조사(모니터링단)·온라인조사, 계약서 법률검토, 간담회 개최 등
- 사후조치 : 공정위 조사의뢰, 검찰 등 관련기관 고발 및 보도자료 제공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 진행	실태조사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125	25	25	25	25	2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담당팀		공정거래팀					
	담당자		이철호					

###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 ○ 추진배경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른 불공정피해 지속 증가
- 공정위의 법집행 수요 충족에의 어려움,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등을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업무·권한 분담 필요성 증대

#### ○ 추진방향

- 현장밀착 법집행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조사·처분권 공유 지속건의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무 이양('19년 시행 예정) 등에 따른 소통채널 구축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도모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횟수	5	1회	1회	1회	1회	1회	
	소요예산	125	25	25	25	25	2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담당팀		공정거래팀					
	담당자		박광열					

□ 현황 및 추이

○ 성별·연령별 자살률 추이

- 연령별 자살률은 70대 이상(54.4명)이 가장 높고, 10대(5.5명)가 가장 낮음
- 연령대별 증감률은 청소년, 청년층이 증가하고 중년층, 노년층이 감소함
- 전년대비 10대(34.1%), 20대(16.7%) 자살률 대폭 증가, 70대 이상(-16.7%), 60대(-7.9%), 40대(-5.8%) 자살률 감소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명)

연령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4.7	34.7	15.0	23.2	32.1	14.6	23.0	32.5	13.9
10-19세	4.6	6.3	2.7	4.1	5.2	2.9	5.5	6.5	4.5
20-29세	17.0	19.3	14.6	14.4	16.8	12.1	16.8	16.9	13.8
30-39세	24.7	31.2	18.0	21.0	26.3	15.7	22.3	27.1	15.8
40-49세	28.7	42.5	15.0	27.5	36.9	18.1	25.9	37.6	14.9
50-59세	32.9	50.6	16.4	28.2	44.5	12.8	29.5	44.9	14.3
60-69세	32.5	51.1	15.5	30.3	46.3	15.7	27.9	44.4	13.5
70세이상	59.8	94.1	35.3	65.3	103.9	37.3	54.4	97.0	29.9

○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자살률 격차 발생

- 자치구 자살률은 강북구(30.6명) 가장 높고, 광진구(15.6명) 가장 낮음
- 구별 자살률 격차 '13년 1.8배, '14년 2.3배, '15년 2.0배, '16년 1.9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2003년부터 자살사망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지속
  - 1위 한국 28.7명(2015년) / 2위 일본 18.7명(2013년)
  - 서울시 자살률의 경우 OECD평균 자살률의 약 1.5배
-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 심화로 시민의 건강형평성 보장 필요
  -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 '13년 1.8배, '14년 2.3배, '15년 2.0배
  - 자살률 격차 감소를 위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징 분석 및 특성화된 접근 전략 필요

○ 기대효과

-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자살률 감소

## □ 사업계획

### 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조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업내용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운영
  - 자살 유가족 지원
    - 자살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애도 상담 등 위기개입 서비스
    - 자조모임 및 사별대상(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별 소모임 운영, 유족 캠프 실시
  - 자살시도 청소년 네트워크 강화
    - 교사대상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설명회
    - 학교기반 자살시도 위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 학교-자살예방센터(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학교(지역)내 청소년 자살 시도 발생 시 위기관리 운영 체계 구축
  - 종교기관과 연계, 성직자·종교인 인식개선을 위한 ‘살사프로젝트’ 운영
  -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 ‘국가통계포털’ 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살사망과 각 지표 간 동향 예측분석  
(주요지표: 인구, 노동, 임금, 교육, 문화, 보건, 사회, 복지, 주택, 물가 등)
    - ‘소방 및 경찰 자살 신고접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위험군 연계체계 확대  
(주요지표: 자살자 및 시도자 일반특성, 시도방법, 조치방법, 후송병원 등)
    - ‘서울시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대상자 자살실태 분석’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주요대상: 방문간호, 찾동, 복지시설, 치매센터, 건강가정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 사업비 : 1,749백만원(시비 100%)



## ②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 사업내용

- 공무원 및 복지서비스 실무자 등을 대상,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양성
-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처치비,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예산지원
-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

#### 찾동 정신보건 전담인력 확대(구별 1명) : 17개구('17년)→25개구('18년)

- ▶ 찾동간호사 : 우울증 등 노인 정신건강 위험군 스크리닝 및 발견
- ▶ 보건소 찾동 전담인력 : 찾동간호사에 의해 의뢰된 자살고위험 노인의 집중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 보건소 진료대상자 중 우울증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실시
- 자살수단(번개) 접근성 차단을 위한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지정·운영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 매월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등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

### ○ 사업비 : 2,500백만원(시비 100%)

###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자살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자살율 (인구십만명당)	-	22명	21.8명	21.6명	21.5명	21.5명	
	소요예산	21,245	4,249	4,249	4,249	4,249	4,24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팀		정신보건팀					
	담당자		송현이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증가로 이주배경자녀 동반 증가 추세
- 국내성장자녀(91%) 대비 이주배경자녀 재학률 저조(43%)
  - ※ '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자녀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습득 어려움이 큰 비중 차지(55%)
  - ※ '16년 중도입국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 소재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기관은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유일함

###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 중도입국자녀의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인원·거주지 등 현황 파악 어려움
- 이주배경자녀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부족 및 협조체계 미구축
- 민간단체 및 자치구의 중도입국자녀 관련 사업경험·이해도 부족
- 중도입국자녀의 가정 내 어려움·불화로 지속적 사업 참여 어려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이주 배경의 경우 초기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단계에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재와 한국사회 문화 부적응 문제가 있음. 이는 공교육 학습과정 진입과 또래문화 적응에도 영향을 주게 됨
- 서울시가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주 배경 자녀의 교육의 질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 기대효과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공간 확보 및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 원활한 적응 및 미래인재로 성장 가능

□ 사업계획

①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기관 운영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공동협력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설립·운영협약 체결('15.8.13., '16.8.11.)
- 사업목적 : 외국인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공간 확보, 교육의 질 제고 및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통한 공교육 진입·한국 사회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외국인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수행주체 : 외국인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관련 민간단체
- 추진방법 : 교육공간 확보 장소 수행단체 선정, 교육공간 리모델링 및 사업 수행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기관 운영	교육참석자수 (명)	25,000	4,000	4,500	5,000	5,500	6,000	
	소요예산	1,000	500	500	500	500	5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담당팀		다문화가족팀					
	담당자		안지호					

## ***2.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높아 생활이 불안정

※ 저소득층 RIR 26.7%로, 중소득층 18.9%·고소득층 20.6%에 비하여 높음

⇒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 보조 필요

-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센터당 2명) 대비 사업대상 지역이 넓고,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주거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센터별로 2~3개구를 관할하지만, 실제로 센터가 소재한 자치구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율이 각각 77%, 83%에 달할 정도로 편중

⇒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1센터 1자치구 책임 관할 체계 확립 필요

### □ 기대효과

-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및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강화

### □ 사업계획

#### ① 주택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복지사각지대(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주거 안정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 추진내용 : 주택법상 '주택' 거주자에게만 주택 바우처를 지급해왔으나,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 거주자에게도 지급 계획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법상 '주택' 거주 임차가구
- 지원금액 : 최소 50,000원 ~ 최대 75,000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저소득층 임대료보조 (주택바우처)	지원호수	52,000	12,000	10,000	10,000	10,000	10,000	
	소요예산	35,600	7,600	7,000	7,000	7,000	7,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팀		주거복지팀					
	담당자		김민지					

## ② 주거복지센터 1자치구 1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1자치구 1센터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지원 체계 확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추진내용 : 센터별 관할 지역이 넓어서 생기는 서비스질 저하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10개 센터에서 25개 센터로 확충하고 찾·동 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구현

○ 사업내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직접비 지원,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행을 통한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주거복지센터	개소수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25개소	누계
	소요예산	12,850	2,250	2,500	2,600	2,700	2,8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팀		주거복지팀					
	담당자		이남규					

## 2-2

##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 현 황

- 심각한 전세난 및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및 임차인 권리 제고를 위한 선진 임대차제도 추진 필요

- 연간 전월세 가격동향(변동률)

(단위:%)

구 분	'13	'14	'15	'16	'17(~10월)
전 세	6.57	3.55	7.25	1.95	1.64
월 세				-0.12	0.00

〈출처: 한국감정원, 월세는 '15.7월부터 산정·공개〉

- 연간 월세 거래 동향(거래건수)

(단위:건,%)

구 분	'12	'13	'14	'15	'16	'17(~10월)
월 세	161,103	195,373	214,686	234,024	231,290	198,938
월세비중	34.7%	39.8%	41.4%	45.6%	47.3%	46.5%
전 세	303,385	295,012	304,452	278,832	258,136	229,234

〈출처: 실거래가신고시스템,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기준〉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1차 기본계획(세입자 권리보호 추진) 보완
- '세입자' 권리보호는 '공간적 포용'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주택 수급 불안/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서울 시민의 주거불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전월세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전월세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도모



## □ 사업계획

### ① 임대차 관련 원스탑 서비스 제공

#### ○ 사업목표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세입자의 원활한 거주이동 지원을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담 및 추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인 력 : 9명(공무원 5명, 상담요원 4명)
  - 주요기능 :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 법률, 분쟁조정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상담 및 용자추천

#### ○ 사업내용

- 임대차관련 일반·법률상담에서 대출상담·지원, 분쟁상담·조정 등 제공
  - ※ '15~'17년까지 총 86천건 상담서비스 제공(연평균 약 29천건)
- 세입자의 원활한 거주이동 지원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속 추진
  - ※ '13~'17(~11월)까지 총 606가구 456억원 대출(연평균 91억원)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주택임대차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건수	186,000	35,000	36,000	37,000	38,000	40,000	
	소요예산	801	151	155	160	165	17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팀		전월세팀					
	담당자		이현우					

## ②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 ○ 사업목표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소송 전 조정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 및 전월세시장 안정 도모

###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개요
  - 구성원 : 11명(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 위 치 :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 기 능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심의·조정
    - ▶ 계약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등

### ○ 사업내용

- 주거 갈등(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내 조정부(소위원회) 신설

구 분		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인원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3명
조정대상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5억 이하*
	조정목적값	제한 없음	2억 이하**
기타 절차 등		같음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률	조정성립률 (%)		70	72	74	76	80	
	소요예산	190	34	36	38	40	4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팀		전월세팀					
	담당자		이현우					

### □ 현황 및 문제점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접수 지속 증가
  - 분쟁조정 신청 접수 : '15년 29건 → '16년 44건 → '17년 77건
- 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
  - 서울에선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롭게 관광 명소화된 공간에서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로 인해 지역 상권 생태계가 교란되어 고유한 지역 색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훼손으로 인한 소속감 저하가 심각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16.12.12.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이후 '17.12.31.기준 시·구 공무원 3명, 변호사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69회 철거현장 출동하여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활동 수행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발되는 지역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고, 영업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의 필요성
- 기대효과
  - 분쟁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조정을 통해 임대차 갈등 해소 및 안정화에 기여
  - 인권친화적 퇴거 환경 조성

## □ 사업계획

### ①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 ○ 사업개요

-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발표 시 세부내용 포함

### ②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조례」 제10조
- 구성 : 30명(공무원 6, 교수 6, 변호사 8, 감정평가사 5, 갈등전문가 5)
- 조정방법 : 신청 사안별로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조정전담 또는 1명 이상 위원 위원이 조기분쟁 조정
- 조정내용 : 권리금, 임대차기간, 임대료 조정, 수리비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소위원회가 임대인·임차인 간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임대차 갈등 해소

#### ○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건 / '17년12월 기준)

신청 연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진행중
		소계	조정회의	중재	자체협의	소계	중재 및 조정회의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지 (소송등)	
계	150	65	15	23	27	67	3	38	26	18
'17년12월	77	33	11	14	8	26		10	16	18
2016년	44	16	0	4	12	28	3	17	8	
2015년	29	16	4	5	7	13	0	11	2	

※ 최근 3년 분쟁조정 접수 150건 중 조정성립이 65건(조정회의 15, 중재 23, 자체협의 27)

## ○ 분쟁조정 유형

(단위:건 / '17년12월 기준)

신청연도	계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조정	계약갱신	원상회복	기타 (수리비 외)
계	150	69	17	17	19	13	15
'17년12월	77	21	15	9	14	10	8
2016년	44	28	2	5	3	3	3
2015년	29	20		3	2		4

※ 최근 3년 분쟁조정 접수 150건 중 권리금이 69건(46%)를 차지하며, 계약갱신(19건) 및 계약해지(17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분쟁조정(건)	540	80	100	120	120	120	
	소요예산	96	12	18	22	22	2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담당팀		상생협력팀					
	담당자		황규현					

## ③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 사업개요

- 인도집행 감독 공무원 및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지방변호사와 협력
- 주거권이 위협받는 철거 현장에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감시
- 철거 현장 이외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권지킴이단 확대 운영

### ○ 인권지킴이단 분야별·상황별 운영 계속 및 보완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계속 운영하되 인권지킴이단 활동 영역 보완
  - 갈등 상황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인권지킴이단 확대 운영 등 중점 관리 대상 지정 운영
  - 인권지킴이단 활동범위 밖에 있는 노점상, 개인 상가세입자 등의 강제 퇴거과정상의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방안 모색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구성·운영을 통해 운영구조 체계화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침 공동 제작, 공동 포럼 개최
  - 철거 현장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사례화 및 법제도 개선 추진
- **현장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인권지킴이단(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대상 공동연수
  - 분야별·쟁점별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대상 간담회, 토론회
  -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b>	추진목표		활동 평가, 활동 지침 제작	활동 지침 보완	상가 세입자 분야 확대	노점상 분야 확대	최종평가	
	소요예산	94	18	18	19	19	20	
<b>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b>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지종대					

###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을 심화
- 가용토지 부족 및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건설의 어려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주거난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 기대효과
  - 청년 주거 기회 확대 도모

## 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18. 2. 22.(목) 기자설명회 후 자세한 내용 공개

## ②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한 입주지원 대책 수립

- 사업내용
  - '5대 입주지원대책' 마련으로 청년이 부담가능한 청년주택 공급
    - ①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②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 ③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④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천5백만 원 무이자 지원(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 ⑤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중인 주택바우처제도의 확대적용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실현

- 월 주거비 지원(월5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의 저소득 청년도 20~30만원 수준 임대료로 입주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1인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
최초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공급	주변시세 80% 이하	
주거비 지원		보증금+월임대료 지원	보증금 지원
평균예상임대료	10만원대	20만원대	20~30만원대

\* 1인 기준중위소득 60%: 991,859원 / 1인 도시근로자소득 70%: 1,697,123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657,193	-	50,849	175,910	219,575	210,858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주택	20,000호		1,689호	5,813호	7,186호	5,300호	
	소요예산	599,670	-	50,670	174,394	215,594	159,011	
주택바우처	바우처수	96,000호		298호	2,527호	6,635호	86,540호	
	소요예산	57,523	-	179	1,516	3,981	51,84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계획팀					
			조성국					



## 2-5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거주인이 1,559명(58.6%)  
(2017.9월말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3	3	1	12	24	2	
입소 인원	이용자수	2,657	148	119	33	706	1,559	92
	종사자수	1,907	106	88	28	458	1,150	77

※ 입소자 2,657명(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1,604명의 0.67%)

- 장애유형별 현황 : 인지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73.5%로 다수

구 분	계	장애유형(단위:명)								비고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 기타	
		소계	지적	자폐						
주장애 (시설현원)	2,657	1,661	1,629	32	221	400	297	41	37	중복 장애 631명 (24.7%)
부장애 포함 (중복체크)		1,953 (현원대비7 3.5%)	1,915	38	299	553	324	88	71	

-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 : 2,004명(78.7%)이 탈시설 미희망

구 분	계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무응답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등	
인원(명)	2,546	534	2,004	8	2,004	754	504	363	177	125	81	
백분율 (%)	100	21	78.7	0.3	100	37.7	25.2	18.1	8.8	6.2	4	

####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 이해당사자(장애인·보호자, 거주시설), 인권단체 등의 정책 공감대 형성 어려움
- 시설 이용자 대부분 장기간 시설생활, 발달장애인으로 자립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두려움이 커 탈시설 미희망
-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소극적 참여, 정책변화에 따른 거주시설 정체성 혼란 등으로 시설 운영 불안정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준용 필요
  - ※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인정
  - ※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입장일치로 채택 → 우리나라 2008년 협약 비준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 당사자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 ○ 기대효과

- 지역 거주지원 기반 강화, 시설 구조적 한계 극복을 통해 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도모
- 정부 및 타 지자체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등 장애인 탈시설 선도

## □ 사업 계획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2,565명
  -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산출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기본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 정책 혼란 최소화
  - 1차 도입기('13~'17) :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 조성 중심
  - 2차 발전기('18~'22)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3차 확대기('22 ~ )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중심

## ①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 사업내용

- 목 적 : 민·관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정책 혼란 최소화 및 탈시설 협치 도모
- 구 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지역주민, 시민 단체, 거주시설 등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화 세부사업 추진 관련 현안 및 후속 조치 협의, 탈시설 시민 인식개선, 이해당사자간 탈시설 정책 공감대 형성 노력 등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22년 12월
- 운영주기 : 반기 1회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횟수	10	2	2	2	2	2	
	소요예산	30	6	6	6	6	6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담당팀		장애인거주 시설팀					
	담당자		조정일					

## ② 탈시설 정보제공

### ○ 사업내용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에게 탈시설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이용인 자립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탈시설 실행력 향상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범 위 : 지방소재 거주시설(18개소) 우선 실시, 향후 전체 확대
- 방 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내 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개소	173	18	26	43	43	43	
	소요예산	88	9	13	22	22	22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담당팀		장애인거주 시설팀					
	담당자		조경일					

### ③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구 분	신 규
관련 기본계획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복지본부, 제20274호, '17.12.20.)

○ 사업내용

- 목 적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
- 방 법 : 장애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준비된 절차에 의해 자립 지원
  - 시설별 탈시설 계획과 연계한 실질적으로 자립 실현을 위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연1회 이상의 정기적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퇴소 전(자립체험 지원, 지역사회 필요자원 사전 확인 등),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등 추진 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탈시설 계획 이행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 2017년 탈시설 협치사업 모니터링시 파악된 퇴소 희망자 후속 조치계획 포함
  - 종사자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추진목표	215	43	43	43	43	43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수립 의무화</b>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b>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b>	담당팀		장애인거주 시설팀					
	담당자		조경일					

#### ④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 ○ 사업내용

- 목 적 :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시설폐지)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적극적 탈시설 도모
-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 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  
(시설 대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운영)
  - ① 공익이사 파견 법인(4개소) : 시설 직영화를 통한 변환 방안 모색
    -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기에 맞춰 단계별 추진
  - ② 일반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계획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
- 내 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변환 지원체제로 직무 재배치, 시설 변환 매뉴얼 제작 등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b>	개소	2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예산확보	1	계획보완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b>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b>	담당팀		장애인거주 시설팀					
	담당자		조경일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서울시 장애인 인구 39만명, 65세 이상 노령인구 130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17% 차지
  - 장애인 국내여행 불편응답은 87.4%<sup>1)</sup>에 이룸
    - ※ 주된 불편요인으로 편의시설 부족, 여행상품 부재 등을 지적
-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노인 등 관광약자<sup>2)</sup>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필요
  - UNWTO에서 장애인 등의 보편적인 관광향유권 선언 및 이에 대한 실천 권고
  - 세계 장애인 인구는 11억명에 이르며, 매년 노령인구의 한국 방문 증가 추세
    - ※ '14년 131만명 → '16년 178만명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도시공간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시설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적 디자인 설계 작업
- 기대효과
  - 장애인,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 약자가 이동과 관광에 불편함이 없는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

1) 장애인 여행실태 조사(한국소비자원, '15.4월)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상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지칭

□ 사업 계획

**①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편의제공**

○ 사업개요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정류소 확대 설치로 시내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5. 1.~'18. 12.
- 사업위치 : 서울시 전역의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사업대상지는 매년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규모 : 총 116개소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장애정류소	109 (51.2억)	17 (7.4억)	40 (20억)	30 (15억)	22 (8.8억)
디자인승차대	7 (7억)	2 (2억)	5 (5억)	-	-

- 사업내용 :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저상버스의 정류소 정 위치 정착 및 근접 정착 유도를 위한 라운드경계석, 휠체어 대기공간, 점자블록 설치, 승하차 구간 지장물 제거



승차대

라운드경계석

휠체어대기공간

알뜰BIT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개소	122	22	25	25	25	25	'19~'22 : 매년구별 1개소
	소요예산	4,880	880	1,000	1,000	1,000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담당팀		정류소관리팀					
	담당자		강설영					

## ②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 추진 방향

- 관광약자들의 자유로운 여행 활동을 위해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시설 개선
- 관광지 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장착 관광버스 도입·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지원대상 : 음식점·숙박업소 등 관광편의시설 운영 개인사업자
- 추진방법
  - 관광약자의 여행수요가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 중점적으로 개선
  - 개선된 지역을 무장애 관광지역으로 선정,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무장애 시설 기준 제시
-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천만원(연간 50개소 이상) ※ 10% 자부담 조건
- 지원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종사자  
접객서비스 개선 지원 등

○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 현 황 : 장애인 관광버스 부족 및 임차료 고가의 이유로 장애인 관광상품  
구성의 어려움 존재, 관광약자 여행편의 저해
- 운영방법 : 市에서 특장버스 1대를 구입·운영
  - 남산전망대, 서울로7017 등 서울 주요명소를 순환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영
  -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여행(지방방문 포함) 시 장애인 관광버스 대여 등





〈 관광편의시설 개선 〉



〈 서울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 운영 〉



〈 서울로 7017 등 무장애 관광코스 연결 〉

## ○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관광약자의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 조사·분석 및 조사결과 무장애 관광정책 수립 및 개선점 도출에 활용
- 조사대상 : 서울거주 장애인, 어르신(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포함 가족
- 조사방법 : 관광약자 대상별 면접방식
- 조사내용 : 여행 희망·경험 여부, 선호 관광지, 관광인프라·관광안내 정보제공·관광종사자 서비스 등 관광 장애요인을 지역별, 장애유형별 세부 분석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총 계</b>	<b>소요예산</b>	<b>5,243</b>	<b>943</b>	<b>1,000</b>	<b>1,050</b>	<b>1,100</b>	<b>1,150</b>	
<b>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b>	목표(개소)	250개소	50	50	50	50	50	
	소요예산	2,793	493	500	550	600	650	
<b>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b>	담당팀		관광정책팀					
	담당자		김소연					
<b>장애인 관광버스 구입 운영</b>	목표(대)	5대	1	1	1	1	1	
	소요예산	1,450	250	300	300	300	300	
<b>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b>	담당팀		관광정책팀					
	담당자		김소연					
<b>관광약자 관광욕구 실태조사</b>	목표							
	소요예산	1,000	200	200	200	200	200	
<b>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b>	담당팀		관광정책팀					
	담당자		김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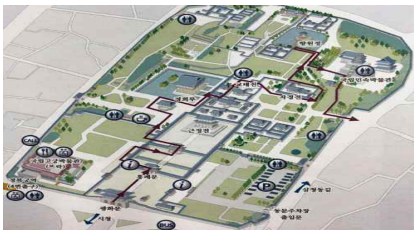
### ③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취약계층 관광콘텐츠 개발

#### ○ 추진 방향

- 지체 장애인 위주 무장애 관광코스(29건) → 대상 세분화, 코스 확대(60건)
- 관광약자의 선택권 확대·보장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제공

#### ○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선정을 통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충

- 관광약자로 구성된 무장애 관광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무장애 서울코스 개발
  - 지체·시각·청각 장애인 및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맞춤형 코스 개발
  - 일부 시민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 및 확산
- 발굴된 여행지·코스를 엮어 서울관광 안내책자 발간(e-book 병행)
  - 기존 텍스트 위주의 관광가이드북 → 시각화된 가이드북 제작
  - 코스 이동동선 표시, 관광편의시설 유무 등을 표시



〈 시각화된 관광가이드북 〉



〈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코스 개발 〉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코스 개발 〉

#### ○ 장애인·저소득층 청소년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 사업기간 : '18.4월 ~ 10월
  - 지원대상 : 장애인(지체·발달·시각·청각) 및 저소득층(어르신·청소년)
  - 지원내용 : 여행참가자별 특성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 운영
    - 여행수요가 많은 봄·가을에 맞춰 여행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여름캠프 추진
    - 후각 등 감각이 예민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코스 구성
- ※ 예시) 시각장애인 : 전통차 체험, 청각장애인 : 난버벌 공연(non-verbal)

#### ○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초록여행) 지원

- 이동차량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여행 활동 지원

※ 차량지원(등록 장애인), 유류지원(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선정지원), 기사지원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경비지원(매월 신청사연 선정)

- 추진방법 : 3자 협약 (서울시,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을 통해 지원

기아자동차 (주)	(사) 그린라이트	서울시
차량제공, 캠프 운영 지원 등	사업운영, 결과관리 등	시민대상 사업 홍보

- 지원목표 : '19년 말까지 1만 명 지원 목표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1,970	370	400	400	400	400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목표(개)	250개	30	40	50	60	70	
	소요예산	470	70	100	100	100	1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담당팀		관광정책팀					
	담당자		김소연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프로그램 운영	목표(명)	7,000명	1,000	1,200	1,400	1,600	1,800	
	소요예산	1,500	300	300	300	300	3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담당팀		관광정책팀					
	담당자		김소연					

## ④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 추진목적 :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월2회 정기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 심의대상 :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로,

##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 추진방향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활용
-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어르신, 여행객 등 모든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권장
- 심의 후 시공 완료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시민불편 사항 점검 등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b>	위원회운영 횟수		24회	24회	24회	24회	24회	
	소요예산	568	113	113	113	113	113	
<b>도시공간 개선단</b>	담당팀		공공디자인팀					
	담당자		설영동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17.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 피해자 80%가 여성으로 위기 상황에 일반인과 함께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화재로 인한 분쟁의 지속적 증가, 이에 대한 조정·중재 수단이 없어 이해 당사자 사이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손해배상, 보증금 지급 등 다툼)
  - 민사소송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발생으로, 피해자 권익구제에 실효성 부족
  - 일부 기업(보험사, 제조사)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구상금 청구 및 피해금액 지급 지연\*
    - (\* 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대기업·보험사를 상대하기 곤란)

※ 화재피해분쟁관련 자료요청 등 건수(최근 3년간)

화재 현황 ('14년~'16년)	정보공개 (보험사 등)	사실조회 등 (법원)	증명원 발 급	제조물피해 (PL법)보상지원	기 타 (법원진술 등)
18,179	1,573	420	7,351	174	14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대도시로서 서울의 복잡성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재난약자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됨에 따라 인권의 문제임
- 재난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의 집중 홍보 및 교육과 훈련이 필요
- 화재로 삶의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체계화된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 기대효과

-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재난사고에 전 계층의 피해 저감
-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제공
- 화재피해시민 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 화재로 삶의 위기 속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이바지

## □ 사업계획

### ① 재난약자를 위한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

#### ○ 추진개요

- 시민에게 재난·안전정보의 통합 제공 및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추진

#### ○ 추진방향

- PC 및 모바일에서 동일한 재난안전정보 콘텐츠 서비스
- 재난유형별 취약내용을 파악하여 선제적 재난 예방 강화
- 도시안전 시정 일원화 서비스 및 홍보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대 상 :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안전사고 등
- 사업내용
  - 시민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검색 위주로 재난안전 콘텐츠 제공
  - 재난 및 사고속보에 따른 행동요령과 관련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 재난유형에 따른 시민중심 행동요령 재구성 및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 재난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유용한 행동요령 추가
  - 서울시 특화 및 재난안전정보 콘텐츠의 지속적인 추가
  - 사용자 편의를 고려 가독성 있는 형태로 재난안전정보 제공

#### ○ 서비스내용

- 실시간 재난 및 사고속보 푸시알림 서비스
-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 예방·대비·대응단계별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 재난약자(어린이, 노약자) 위한 요령
- 위치기반 사용자 맞춤서비스 : 내주변 시설물 정보, 대피소, 쉼터 등
- 기상 및 생활보건의지수, 심장자동충격기, 병원·휴일약국, 주간날씨 등
- 트위터 등 SNS 활용한 정보공유 콘텐츠 등

○ 2018년 추진계획

[ 서울안전 앱 서비스 ]

- 개시일 : 2018. 1. 10.(수) 09:00 ~
- 개발유형 :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다운로드 : 모바일 마켓에서(구글, 애플, 윈스토어) “서울안전”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 대 상 : 총 25종
  - 재난정보 : 한파, 대설, 지진, 폭염, 호우, 조류독감, 산사태, 감염병 등
  - 사고정보 : 지하철사고, 화재, 도로교통, 붕괴 등

[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

- 개시일 : 2018. 1. 15.(월) 09:00 ~
- 사이트 :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
- 특 성 : 반응형 웹(PC·스마트폰·패드의 화면크기 자동 조정)
  - ※ 기존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시민중심 행동요령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재오픈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재난안전정보 포털 구축	포털 구축		서비스 개시	2단계 콘텐츠 추가	재난약자 행동 요령 추가	포털 이용 활성화	포털 이용 활성화	
	소요예산	500	-	150	150	100	10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담당팀		재난관리총괄팀					
	담당자		김선애					

## ②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목적

: 서울시 인구의 2.7%인 장기체류 외국인과 방문 외국인이 거주 및 체류기간동안 안전하게 서울살이 및 여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 제공

### ○ 사업내용

- 다국어 배경지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PC, 모바일웹)

-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서비스 제공

- SNS 연계 및 신고요령 서비스

- 지도 데이터 변환 및 수시 정비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추진목표		방침 수립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이트 홍보 강화	방문객중심 행동요령 추가	사이트 이용 활성화	
	소요예산	550		150	150	150	10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담당팀		재난관리총괄팀					
	담당자		김선애					

## ③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 ○ 사업개요

-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법률화(조례)하여 권익보호와 맞춤형 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진행 중인 화재피해시민 지원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지원 방법을 총괄하여 선진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

※ 생계지원, 제조물화재 피해보상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 피해구제 기반조성

\* 주택수리(91세대), 생계지원(63세대), 잔존물청소(257세대), 제조물화재 피해보상지원(327건),



심리상담지원(2,197건)

- ▶ 화재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는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
  - ※ 발화지점의 명확한 판정 및 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 해소
  -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제조사 등 책임기피 해소로 금전적 보상 혜택 지원
- 화재피해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 시행
  - ▶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황이 없는 화재피해시민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호·보험·보상 상담, 시설복구 및 심리치료 등 안내

##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시민 구제에 관한 조례’ 제정
  - 화재피해구제 절차 명확화, 민관협력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 시행
  - 구호·보험·보상 상담, 시설복구 및 심리치료 등 원스톱 안내
- 제조물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및 제조물 화재감소 유도
  -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화재입증을 통한 피해시민에게 경제적 보상 지원
  - 화재 유발 제조물 결함을 제조사에 통보하여 리콜 등을 통한 제조물 화재예방
- 화재피해시민 지원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조사인력 재배치
  - 화재조사 시스템 조정·개편을 통한 피해지원 제도의 고도화 및 상설화
  - 과학적 분석·연구기능 강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 화재피해구제를 위한 협의체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피해구제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및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후원 민간단체, 복지단체, 소방기관 등 효과적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	자원 건수	200	30	35	40	45	50	민간단체 와 MOU 체결
	소요예산	-	-	-	-	-	-	
화재피해분쟁 조정위원회	위원화운영 횟수	75	5	10	15	20	25	
	소요예산	70	-	10	15	20	25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	안내 건수	1,650	150	300	350	400	450	
	소요예산	70	-	10	15	20	25	
화재조사시스템 개선·강화	시스템 개선·강화	-	-	시스템 개선·강화	-	-	-	
	소요예산	500	-	500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담당팀		재난조사분석 팀					
	담당자		김정현					

### □ 현황 및 문제점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 초미세먼지  $5\mu\text{g}/\text{m}^3$  증가 → 폐암 발생위험 18% 증가
  - 초미세먼지  $10\mu\text{g}/\text{m}^3$  증가 →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자 8.8%, 심혈관계 질환자 3.7% 증가
- 초미세먼지는 '10년 이후 환경기준( $25\mu\text{g}/\text{m}^3$ )을 달성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회수, 나쁨일수 증가 등 위험 요소 증가
  - 주의보 발령회수 증가: 3회('15년) → 0회('16년) → 3회('17년)
  - '나쁨이상'( $50\mu\text{g}/\text{m}^3$ ) 일수 증가: 5일('15년)→10회('16년)→15회('17년)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서울 맞춤형 감축정책 추진 필요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2017년의 데모크라시 서울' (democracyseoul.org)의 투표결과 '미세먼지' 절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되는 등 대기질은 시민의 건강권 및 도시 환경과 관련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절감, 녹지 조성 등 시민 환경권에 대한 인권적 고려를 통해 시민 환경권 및 건강권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 계획

### ① 시민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줄이기

#### ○ 사업개요

- 초미세먼지 달성목표: '18년  $20\mu\text{g}/\text{m}^3$  → '22년  $18\mu\text{g}/\text{m}^3$
- 추진방향
  -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서울 맞춤형 특화 감축정책 추진
  - 고농도(Hot-spot) 노출 인구 건강보호 등 인체위해성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등 취약계층 공적 보호 조치 정착
  - 중국 및 수도권 주변도시와 적극적·주도적 협력하여 실질적 개선 도출

#### ○ 사업내용

- 시 특화전략 접목,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감축
  - 운행제한 본격추진을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 45,237대('18년)
    - ▶ '18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43,137대 저공해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2,100대 추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인천·경기 17개시
    - ▶ 도심 및 외곽 주요 진입로에 14개 지점 운행제한 단속장비 추가확대 설치
  - 자동차 친환경등급/표시제 시행을 통한 친환경차량 전환 유도
    - ▶ 친환경차량 등급에 대한 환경부 고시 후 녹색교통진흥지역 적용 추진
- 난방·연소 등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 강화
  -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등을 통한 4계절 도로청소 체계 확대
    - ▶ '18년까지 분진흡입청소차량 117대(누적) 조기 확보 추진
  -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가정용 및 사업장 저녹스버너 확대 보급
    - ▶ '18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000대 보급, 저녹스버너 450대 보급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정착
  - 고농도 지역(Hot-spot) 지역의 중점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확보

- ▶ 공해차량 제한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 중점 관리방안 마련
-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본격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 시민·수도권·동북아·수도권 등과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운영 등 대외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수도권 지자체 실질적 공동사업 협력
    - ▶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및 「PM·NOX 저감대책 추진기획단」 운영
  - 시민·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치를 통한 생활 속 시민 실천활동 강화
    -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정책세미나 개최 및 홍보행사 실시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초미세먼지 20%줄이기	추진목표	18 $\mu\text{g}/\text{m}^3$	20 $\mu\text{g}/\text{m}^3$	20 $\mu\text{g}/\text{m}^3$	19 $\mu\text{g}/\text{m}^3$	19 $\mu\text{g}/\text{m}^3$	18 $\mu\text{g}/\text{m}^3$	
	소요예산	552,785	110,493	110,573	110,573	110,573	110,57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담당팀		대기정책팀					
	담당자		송형래					

## ② 도시 가로수 확충 및 녹지조성 확대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을 향상시키며,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수와 녹지의 생육환경 개선 및 확대
- 환경과 생태적으로 열악한 가로변에 선형 녹지축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오염물질 흡수 및 도심 열섬화 완화, 도시 경관 향상

- 사업대상 : 시관리 도로의 가로수와 가로변 유휴공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 사업내용

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확충 - 가로수 1,100주, 띠녹지 55,000 $m^2$

-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도로 개설사업을 할 경우 가로수 조성
-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에 가로수 메워 심기, 식재간격이 넓은 곳 새로 심기 추진
- 가로수 관리시설(보호틀·덮개, 보호대 등)의 보수·정비 추진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은 곳에 띠녹지 확충 및 정비

② 가로 유희공지에 녹지 확충 - 147,000 $m^2$

- 교통섬, 중앙분리대, 안전지대, 고가하부 등을 활용 녹지공간 확대
- 조성된지 오래되어 기능 발휘가 적은 녹지 보수·정비 추진

③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확대 - 16km 8,000 $m^2$

-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절개지, 담장 등 미관 저해 구조물 녹화
- 조성된 지 오래되어 기능 발휘가 적은 벽면녹화 지역의 보수·정비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44,278	15,582	7,174	7,174	7,174	7,17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확대	추진목표 (주/ $m^2$ )	1,100/ 55,000	300/ 15,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소요예산	20,766	6,166	3,650	3,650	3,650	3,650	
푸른도시국 조경과	담당팀		조경관리팀					
	담당자		변동풍					
가로 유희공지 녹지 확충	추진목표 ( $m^2$ )	147,000	39,000	27,000	27,000	27,000	27,000	
	소요예산	16,084	7,683	2,100	2,100	2,100	2,100	
푸른도시국 조경과	담당팀		조경관리팀					
	담당자		변동풍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확대	추진목표 (km/ $m^2$ )	16/ 8,000	4/ 2,000	3/ 1,500	3/ 1,500	3/ 1,500	3/ 1,500	
	소요예산	7,428	1,732	1,424	1,424	1,424	1,424	
푸른도시국 조경과	담당팀		조경관리팀					
	담당자		함희진					

### ***3.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내 고착된 성차별과 혐오의식 심화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취업에 있어서 외모·나이 차별, 직장 내 여직원 복장 규제, 결혼한 여성의 퇴사 강요 및 성희롱 사건 등 일상 속 성차별 사례 만연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발생 이후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한 혐오 논쟁(일베와 메갈리안) 격화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확장 필요
  - 중·고등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 사건 2012년 642건 → 2015년 1842건 2.9배 증가(한겨레신문 2016.7.31.)
  - 예방교육효과가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증진 기회를 통한 성평등 인식 제고
  - 정보제공 중심의 주입식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평등한 소통 역량증진교육으로 교육방법론의 변화 추진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성 인지적 인권활동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성 인지적 인권 기관 및 활동가 등은 인권 교육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할 수 있는 현장 필요
  - 교육청 및 학교는 교육 환경 변화(자율학기제, 인권동아리 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한계
  - 지역사회의 경우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위 간 네트워크 절실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여성 인권 향상의 토대 구축을 위한 ‘성평등’ 인식 문화 확산이 시급함
- 기대효과
  - 성평등 교육과 시민의 직접참여 활동을 통해 성차별 인식 개선



## □ 사업 계획

### ① 민관협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성평등교육 추진

#### ○ 사업내용

- 학교컨설팅 :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평가
- 학생교육 (학급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각 반에 전문강사 파견하여 성평등 관련 주제 토론과 활동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  
※ 교육주제)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인권 등 5차시
- 교직원연수: 교직원의 성평등 전문성과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1~2회
- 학부모교육: 학교가 실시하는 성평등 관련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프로그램 지원 1~2회
- 학생자치 역량강화: 학생회, 대의원회 등 대표 학생들과 함께 교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 지원 1~2회
- 특별활동: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토론회 등의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함양 1회



#### 학생 중심 활동

- ✓ 중학교 1학년
- 반별 토론참여형 활동
- 2학기부터, 5차시 진행
  
- ✓ 또래지도자 회의
- 학생회, 대의원회 등 교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 지원



#### 학교 문화 조성

- ✓ 학교 컨설팅
- 환경, 교육 등 다각도 체크
- 교육부 개발 매뉴얼 활용
  
- ✓ 성평등 특별활동 운영
- 동아리, 토론회, 축제 등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운영 및 지원



#### 교직원 · 학부모 교육

- ✓ 성평등 프로그램 진행
- 가정-학교 연계와 연속성
  
- ✓ 연수, 워크숍, 간담회 등
- 사례를 통한 참여형 활동
- 관점 잡기, 양육 및 지도의 방향성 공유

○ 추진방법

- 민관협의체 구성 + 성평등 교재 개발 +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 국제적 기준(유네스코 등) 및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교재 개발·보급
  - 성평등 교육 현장활동가 양성(53명) : 성평등 교육 강사 및 코디네이터로 활동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성평등 교육 내용 속 인권보호 및 증진 콘텐츠 지속적 개발 지원
-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시행 학교에 대한 교육청 협의 통한 성평등 학교 지명

○ 시민참여방안, 관련기관 협조, 법령·조례 개폐 필요사항 등

- 민간 전문기관 등 민관협의체계를 구성하여 공조체계 구축
- 성평등 교육 강사단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사례 공유 등 역량강화 지원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성차별 인식 개선	교육대상(명)	25만	3만	4만	5만	6만	7만	
	소요예산	2,441	400	440	484	532	58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정책 기획팀					
	담당자		배화정					

## ②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 ○ 사업개요

-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관련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
  - ‘UCC공모전’, ‘말하기 경연대회’, ‘어린이·청소년 문화콘텐츠 공모전’ 등
- 시민이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이주여성을 위한 성평등 가이드, 청소년과 성평등 가이드 등

###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학교 및 인권교육 현장에 교과과정의 성평등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생산지원
-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콘텐츠 개발 보급

### ○ 시민참여방안, 관련기관 협조, 법령·조례 개폐 필요사항 등

- 일상 생활에서의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 기존 성평등 교육 활동 속에서 교육 내용 속에서 발굴한 사례 등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일상 속에서 성평등 구현 사업	홍보대상(명)	30만	4만	5만	6만	7만	8만	
	소요예산	990	120	150	200	250	27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팀		여성정책 기획팀					
	담당자		배화정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다양한 소수자들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도 큼
  - 「서울시 소수자 지형」 보고서 (서울연구원, '16. 3월) ※ 2015년 기준
    - 서울 전체 인구 대비 19세 미만 16.4%(1,645,801명), 65세 이상 12.6%(1,262,436명)
    - 전국 대비 서울 거주 외국인 26.3%(457,806명), 외국인 근로자 19.2%(116,817명)
    - 전국의 여성 결혼이주민(125,073명) 중 17%(21,308명)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4. 12월)
    - 성소수자 응답자의 48.1%가 서울에 거주하고, 51.5% 직장 소재지가 서울에 집중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서울은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공존하는 도시임
  - 이와 같은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는 한편으로 도시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서울 역시 다양성 증가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증가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서울시 거주민과 시 행정에 다양성의 가치 확산
  - 다양한 도시 거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 조성

## □ 사업 계획

### 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 ○ 사업개요

-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참고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 서울시 인권위 소수자 인권 포럼(미혼모,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서 제시된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특별사업(2018~)
- 서울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수립중)’ 등

#### ○ 사업내용

- 사회적 소수자 차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내용 작성
  - 인권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당사자 인권단체 등 의견 수렴 통해 실효성 제고
  - 시립시설 이용, 대관 및 기타 대민업무 등 서울시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유의사항을 대상별(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가이드라인 교육, 홍보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내용 갱신
  - 새롭게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례 및 권고 등 반영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별 가이드라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소요예산	25	5	5	5	5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조병훈					

## ②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 III-6,9
- 목표 :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인권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 방향 : 연중 다양한 방식의 꾸준한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등 시민참여형 집중 캠페인 진행

### ○ 사업내용

- 인권정책 홍보
  - 소수자 가시화,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소책자·동영상 등 제작·배포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인권교육 등 병행하는 집중 홍보 주간 지정·운영 등
  - ※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인권주간과 집중 홍보 주간 연계 가능
- 인권문화행사 개최
  - 소수자, 사회적 약자 관련 전시·강연 등 기획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문화행사	회	5	1	1	1	1	1	
	소요예산	205	41	41	41	41	4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송지선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서울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과 세계자료실(다문화자료)이 있으나 인권 자료실을 별도로 추가 설치할 적정 공간이 없어 기존 자료실 기능 확대
- 인권현장 대상지역 추천('15.10. ~ 12.)
  - 인권현장 예비목록 97개소 및 시민 인권현장 추천 시민 공모 개최
- 인권현장 선정위원회 개최(총 4회, '16. 1.~ 9.)
  - 서울시 인권현장(114개소) 및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예정지(62개소) 선정
- 인권현장 탐방코스 개발 : 4개 테마 7개 코스
  - 남산(자유길), 민주화(4월길,6월길), 노동(구로길,전태일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시민들이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가치를 공유하며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권 향유 보장 필요
- 공공도서관에서 인권관련 지식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제공
- 도시공간에서 다수의 인권현장을 발굴하여 시민의 인권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함

### ○ 기대효과

- 인권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인권 관련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 인식 제고와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 서울의 근현대사 속에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발굴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기억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인권현장을 시민이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와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인권현장에 얽힌 사연과 우리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 계획

**① 인권관련자료 개발 및 수집 제공**

○ 사업개요

- 장애인자료실, 세계자료실(다문화자료) 기능 확대 및 내실화
- 인권에 대한 관심 유도과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도서 전시

○ 사업내용

- 인권 관련 자료구입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집
- 수집한 자료와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주제 도서 전시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관련자료 개발 및 수집 제공	추진목표		인권자료 확충 및 제공	인권자료 확충 및 제공	인권자료 확충 및 제공	인권자료 확충 및 제공	인권자료 확충 및 제공	
	소요예산	120	20	25	25	25	25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담당팀		정보서비스과					
	담당자		김현화					

**② 인권도시공간 발굴**

○ 추진방향

-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를 통해 인권의 역사현장을 보존하고 살아있는 인권 교육의 장으로 조성
- 시민인권이 화두가 됨에 따라 인권현장을 시민이 직접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인권투어 '사람의 길' 조성 (시장요청사항, '15.1.21)



- 표지석 설치장소 : 서울시 내 전역 인권현장 62개소(인근 공공보도 위)
- 표지석 디자인
  - 디자인 : 현장의 특성에 따라 3개 테마로 분류
    - ⇒ ● : 시민저항, ▼ : 국가폭력, ■ : 제도 내 폭력
  - 문구내용 : 서울시 인권로고, 장소 명칭, 발생 연도, 장소를 설명하는 문안 기재, 해당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
  - 설치규모 : 시민 통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인권현장 인근 공공보도 위에 보도블럭(가로x세로 35cm) 모듈
- 인권현장 탐방 코스 개발 : 4개 테마, 7개 코스
  - 남산(자유길), 민주화(4월길,6월길), 노동(구로길,전태일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 ○ 사업내용

- 인권행정 추진에 따른 인권현장 발굴, 인권 표지석 설치, 홍보물 등
-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 설치 대상 62개소 중 45개소 설치 완료
  - 설치현황 : '16년 39개소, '17년 6개소
  - 설치계획 :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차적 설치 예정
- 인권현장 도보탐방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인권사적 가치를 지닌 인권현장 지속 발굴 및 콘텐츠 보완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점진적 확대 운영 : 4개 코스 ⇒ 5개 코스
  - 시티투어버스와 연계, 정류장 인근의 탐방코스에 대한 관광 상품화 추진
  - 인권현장을 활용한 사진전 개최 추진 : 세계인권선언의 날 문화행사와 연계 검토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인권탐방 프로그램	표지석 설치	25	5	5	5	5	5	
	소요예산	518	68	100	110	120	12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협력팀					
	담당자		조혜윤					

###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 양극화와 1인 가족 증가, 고령인구 급증 등으로 문화 취약계층 증가
- 과도한 노동과 학습시간으로 시민 행복도 저하, 영화를 제외한 예술 관람률 저조
-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관람률이 증가하여 소득별 문화향유 격차 존재
  - 문화예술 관람률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0.9%, 600만원 이상 89.5%  
(2016 문화향유실태조사, 문체부)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사회 발전의 주요 척도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적절한 문화향유 체험의 기회와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문화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 ○ 기대효과

- 문화소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창작,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계층, 소득, 연령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 □ 사업 계획

#### ① 문화통합권 이용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사업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이 가능한 문화카드 1인당 1매 지급
- 추진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으로 카드 발급,  
사업 수행자인 서울문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을 통한 비용 정산

○ 사업내용

- 연간 한도금액을 6만원에서 '18년 7만원, '19년 8만원, '21년 10만원으로 인상 추진
- 이용률('16년 84.7%) 제고를 위해 자치구 및 서울문화재단 협조를 통한 신규 가맹점 발굴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문화통합이용권	명	1,355,000	271,000	271,000	271,000	271,000	271,000	
	소요예산	116,805	19,069	21,719	21,719	27,149	27,14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담당팀		예술교육팀					
	담당자		김미화					

## ② 공공도서관 확충

○ 사업필요성

- 공공도서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으므로 도서관 확충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 사업내용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 공공도서관 현황

( '17. 현재 )

구 분	총계	공 립					사 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개 소	188	162	1	136	22	3	6	11	9

• 공립 공공도서관은 '06년도 58개소에서 '17년도 162개소로 약 2.8배 증가

-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
- 시비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 건립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 확충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공공도서관 확충	추진목표(개소)	40	8	8	8	8	8	
	소요예산	42,500	8,500	8,500	8,500	8,500	8,500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담당팀		행정지원과					
	담당자		최문환					

### ③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 사업필요성

- 장애인 대상 미술교육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미술치료를 통한 기능 회복 목적으로 운영되어 증가하는 장애인 전문예술교육 수요 충족 필요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으로 자아실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발달장애청소년의 긍정적 정서 공유 및 사회성·협동심 향상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24세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교육,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개최 등
- 추진방법 : 교육전문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추진목표(명)	265	50	50	55	55	55	
	소요예산	530	100	100	110	110	11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담당팀		예술교육팀					
	담당자		임현진 2133-2566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조사 및 서울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 성소수자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전과자와 함께 인권존중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로 평가됨
    - ‘성소수자 인권 존중 안됨’이라는 응답 비율 : 일반응답자 70.1%, 전문가 81.6%
  - 「서울시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보고서(’17년)」 중 서울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 대비 현저히 높았음
    - ‘서울시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 : 56.3%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계속
- 국제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적극적 인권 증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반면,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 그 결과 여러 조사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 필요

####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추진체계 통해 성소수자 인권 실태 개선
- 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개선

### □ 사업 계획

## ①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 ○ 사업개요

- 별도의 담당부서가 있는 다른 소수자 집단(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 달리 성소수자는 시정 내에 관련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현실 개선
-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추진 체계 마련

### ○ 사업내용

-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 통해 기초 마련하고, 관련 부서(청소년, 보건 등) 연계
  -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접점 구축
-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추진
  - 정책 예시 : 성소수자 친화적 행정 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성소수자 보건 정책, 성소수자 청소년 정책, 성소수자가 포함된 문화다양성 정책 등
  - 시민사회와 소통 통해 지속적 보완 추진
- 성소수자 상담 역량 강화
  - 시 운영 상담센터(120 다산콜 등)상담 전문가의 성소수자 관련 편견과 차별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전문적 상담을 위해 상담기관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 연계 지원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인권증진 정책		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정책 추진	
	소요예산	70	-	10	15	20	2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조병훈					

## ②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업기간 : 연중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p>◆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p> <p>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p>
---

###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전직원 대상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 하는 인권교육인 「서울 인권아카데미」에 성소수자 차별인식개선 내용 포함

### ○ 사업내용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포함
  - 관련 법령, 제도 소개
  -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 교육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성소수자 차별인식개선 교육	회	50	10	10	10	10	10	
	소요예산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라-1 ③ 공무원 인권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연계 추진-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협력팀					
	담당자		구성모					

## **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관련 연구 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는 주로 국제협력과 기업분야에 도입되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연구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입 준비 중임
  - 해외에서는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하 기도 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2년부터 서울시 성북구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대 표적으로 청사신축, 투표소 설치 시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개선 조치
    - ※ 대상 : 조례·규칙, 퇴거사업, 3년 이상 주기 계획, 단위사업, 기타 주요정책 등
- 이에 2016년 9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제8조) 및 인권센터(제11조) 업무위탁 근거조항을 각각 신설한 바 있음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민간 분야 전문성 도입 및 시민사회 협치 필요성 증가
- 인권정책의 평가 제도이자 시민의 행정참여제도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요 구가 증가하고 있음

#### ○ 기대효과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 인권 향상 및 서울시 인권행정의 실효성 강화
-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정 내 인권 주류화 실현 및 시민참여 확대
-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권리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을 통해 인권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 계획

### ① 인권센터 설치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인권센터)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간 분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 인권행정의 실효성을 강화

#### ○ 사업내용

- 인권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인권센터 설치 계획 수립

- 민간위탁 대상 업무 도출 및 인건비·사업비 산출 등

- 민간위탁 방식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사업비 예산 반영 등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센터 설치	인권센터 설치		운영계획 수립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2,000	-	500	500	500	50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조병훈					

###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 사업개요

- 인권영향평가 : 정책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
  - 의의 : 사후 갈등 발생 소지 완화, 시정 내 인권 주류화, 정책 효과성 제고 등
  - 원칙 : 참여, 투명성, 책임성 등
- 타 지자체 및 타 분야(환경, 성별 등) 영향평가 사례 참고하여 도입 방안 마련
  - 방법 : 자체평가(체크리스트), 특정평가(위원회 등), 외부전문기관 평가(용역) 등

○ 사업내용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 실시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연구용역,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적절한 도입방안 도출
  - 매년 분야별로 대표적 평가대상 연 2~3건 선정 후 시범 실시
  - 시범실시 결과 반영하고 미비점 보완하여 전 시정 내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 주요 사업·정책은 평가과정에 인권단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실시 (건)	11	1	2	2	3	3	
	소요예산	185	25	40	40	40	4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조병훈					

## ③ 인권 아카데미 운영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인권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연중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 관련 전문기관 용역사업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사무위탁 등 운영방식 전환 검토
- 시 사무위탁기관, 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강의안, 영상 등 교육용 콘텐츠 지원, 인권교육 전문강사 명단 공유

### ○ 교육방법

- 기관(부서)·업무·직급 등으로 교육대상 구분, 대상별 교육내용 구성
- 인권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사례학습, 교육생 및 강사 간 토론 등을 병행하는 참여형 교육 진행
- 인권포럼, 인권문화행사 등 인권감수성 향상 기회 다각화

### ○ 교육내용

- 인권의 개념 이해, 서울시 인권정책 소개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결정례집을 기초로 한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침해 시 대처방안 소개
-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 홈리스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의 불가분성 이해
- 각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 관리자 대상으로 조직, 정책수립 등에서 인권존중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자의 자세 교육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아카데미 운영	회	1,000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	1,155	231	231	231	231	23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협력팀					
	담당자		구성모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2013~2017)
-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및 시행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 요 성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평가 실시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인권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효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과정,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로 보다 충실하게 인권 시정 추진

 사업 계획

---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 방 향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
- 방 법
  - 중점과제 :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심층 검토 후 인권위원회 보고
  - 일반과제 : 부서 자체 평가 후 공문 송부

○ 사업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요청 (12월)
  - 올해 사업 평가 및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검토 및 인권위원회 보고 (2월)
- 인권정책 기본계획 사업 담당자 인권 교육 실시 (3월)
  - 시행계획 검토 결과 공유
  - 분야별 인권 업무 유의사항 등 교육
- 인권정책회의 개최 (연 1회)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의 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개최목적 : 기본조례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협의·조정 등
  - 참석대상 : 관계 부서 실·국장급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주관 : 시장)
- 중점과제 위주로 심층 모니터링 추진 (연중)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평가 보고	5	1	1	1	1	1	
	소요예산	50	10	10	10	10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박유경					

## ② 인권실태조사 추진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제4항
- 조사 대상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기본 실태에 대한 파악 또는 심화된 조사가 필요한 과제 등
- 선정 방법 :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결과 활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 방향, 내용 등에 대한 조언 및 인권 행정 과제 발굴 등

○ 사업내용

- 월별 추진 일정

- 2월 : 과제 제안 요청 및 수합
- 3월 : 과제 선정 및 방침 수립
- 4월 : 입찰 공고 및 계약 추진
- 5~11월 : 실태조사 추진 및 마무리

- 과제 발굴 방안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분석
- 인권기본계획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배경 조사
-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건 수	14	2	3	3	3	3	
	소요예산	737	137	150	150	150	15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박유경					



###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인권 개념은 국가의 의무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정부와 인권’이 주목받는 등 도시 단위 인권보장 체제가 주목 받고 있음
  -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015. 8.)
    - 인권 존중, 보호,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요 당면과제 및 사례 등을 다룸
- 서울은 인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그 인권적 성취를 국내외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 (2016. 8.)
    -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으로서 UN의 인권보호메커니즘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시가 가입한 협의체 도시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제시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국제 인권기구 및 국내외 인권도시와의 협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권도시 서울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 인권정책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적 대응이 요구되는 공통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협력 필요
- 기타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례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교류 및 협력 필요

#### ○ 기대효과

- 국제 인권기구, 해외 인권도시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교류·협력 증진
- 국내외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행정 발전 도모

□ 사업 계획

**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국내외 인권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도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
- 국제 인권기구, 해외 인권도시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교류·협력 증진
-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 학계,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 활성화

○ 사업내용

-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공동과제를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도시 간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등 개최
- 국내외 인권도시 간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축
  - 국내외 인권도시를 잇는 중심축으로서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 주도
- ※ 주요 국제 인권기구 및 인권도시와 공동사업 등 지속적 교류협력 증진 : 상시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인권’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 모니터링
  - 가입된 국제 협의체(UCLG 등)와의 협력 등 국제 인권협력 네트워크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b>국제 컨퍼런스 개최</b>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 개최	협의체 구축 준비	협의체 구축	각년마다 추소확대
	소요예산	1,304	319	139	339	148	359	
<b>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b>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조병훈					

## ②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 ○ 사업개요

- 목 적 : 자치구 및 광역지자체 인권행정 현황 파악, 보완
  - 인권조례, 인권기본계획, 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여부 등 각종 인권 현황 파악
- 추진방향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참석 범위를 현재의 실무자급에서 국, 실장급으로 확대 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정책 결정력이 있는 회의체로의 역할 확대 추진

### ○ 사업내용

- 회의 운영
  - 각 지자체 인권행사 연계,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지원
  - 주요 인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법론 논의 등 의제 선정 및 진행 지원
- 운영 강화
  - 회의 참석 범위를 현재의 실무자급에서 국, 실장급으로 확대 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정책 결정력이 있는 회의체로의 역할 확대 추진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 정례, 공고화	네트워크 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간 협의회 개최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 확대 방안 검토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	
	소요예산	15	3	3	3	3	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지종대					

## ③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 사업개요

#### - 목 적

- 25개 자치구의 인권행정 추진상의 정보공유, 주요 사회적 인권의제에 관한 공동대응 모색
- 서울시 등 인권행정의 선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기초지자체 인권행정 체계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통해 인권도시 서울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

- #### - 방 향 : 자치구 인권현안 정보 공유 및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정보 및 직무 교육 등

### ○ 사업내용

- 자치구 간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의견 수렴, 인권행정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한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안 및 협의
-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사로서의 역할 수행, 의장 역할은 개별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수행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횟수,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회의 개최 횟수	4	자치구 네트워크 회의 구축	1	1	1	1	
	소요예산	10	2	2	2	2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지중대					

## ④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 사업개요

- 목 적 : 인권단체와의 꾸준한 협력관계 축적으로 상호신뢰 형성
- 방 법 : 분야별, 의제별 간담회 및 심화 토론회 등의 개최로 시정책 개선 방안 도출 및 반영

### ○ 인권분야별 의제발굴 간담회, 정책개발 위한 심화 간담회 각 2~3회 개최

- 분야별(의제별) 간담회의 참석 단체 및 활동가 구성 방식 사전 협의 추진
- 간담회별 사전 모임 통해 진행방식, 최종 활동 목표 설정, 활동결과의 행정체계 반영 등 추진 상황 공유체계 확정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횟수,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단체 간담회	개회 횟수	15	3	3	3	3	3	
	소요예산	15	3	3	3	3	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지종대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필수적임
-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대해 인권적 자문을 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인권 진정사건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인권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음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서울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정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관련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견고하게 시민 인권 보장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

### ○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 시민배심원제 등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한정되어 있던 안전범위를 범사회적 인권문제로 확대하여 시민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 □ 사업 계획

###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 ~ 제17조
- 인원 : 총 15명 (위촉직 위원 14명, 당연직 국장 1명)
- 임 기 : 3년 (연임 가능)
  - ※ '16.2.2~'19.2.1(2기), '19. 2. 2 ~'22. 2. 1(3기)
- 역할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자문 등

#### ○ 사업내용 : 정기회·임시회 및 기타 대내외 활동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인권정책 등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인권위원회 포럼, 인권단체 연계 간담회 등 개최
- 서울시정 권고 개선 관련 추진
-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원 활동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위원회 운영	전체 회의 개최 횟수	40	8	8	8	8	8	
	소요예산	430	86	86	86	86	8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정책팀					
	담당자		박유경					

## ②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조례 제13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방향 : 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사업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

###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시민 인권관련사업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 ※ 지원대상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의 사업
- 인권단체 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 등 상시지원 : 선정단체 대상 집행지침교육, 사업실행 및 회계관련 상담지원 등
- 사업추진내용 및 회계처리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
- 사업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및 정산

### ○ 사업기간 : 연중 실시

### ○ 사업내용

- 시민 인권증진과 직결된 인권 특화사업 발굴·지원
- 인권교육, 연구 등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지원
-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규모 강화
-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 간 성과공유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피드백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시민참여 인권정책 개발, 공모	개 (지원사업 수)	40	8	8	8	8	8	
	소요예산	1,105	221	221	221	221	22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협력팀					
	담당자		조혜윤					



## 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4조
-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중 특히 시민에게 영향력이 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배심회의를 개최 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보장

### ○ 사업내용

- 배심원단 구성 : 200명(시민 150명, 전문가 50명)
- 안건선정 :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중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안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 회의운영 : 배심원 16명 선정(주재자 1, 시민 10, 전문가 5)  
 ※ 배심원 선정은 배심원단에서 각 사건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 회의개회 : 배심원 2/3이상 참석으로 개회
- 배심평결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재적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평결효력 : 배심원 평결은 구제위원회 결정을 기속하지 않지만 최대한 존중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시민인권 배심원제	회의개최 (횟수)	15	3	3	3	3	3	
	소요예산	33	6	6	7	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김송이					

## ④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 제23조
- 구성 : 9명(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6명)

### ○ 직 무

-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조사 및 결정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인권침해 결정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의결
- 범 위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 인권침해 조사 절차

- 인권침해신고 접수 → 사건조사 실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상임시민인권보호관) → 심의·의결(구제위원회) → 결정문 작성 → 결정문 검토 → 결정문 인권담당관에 통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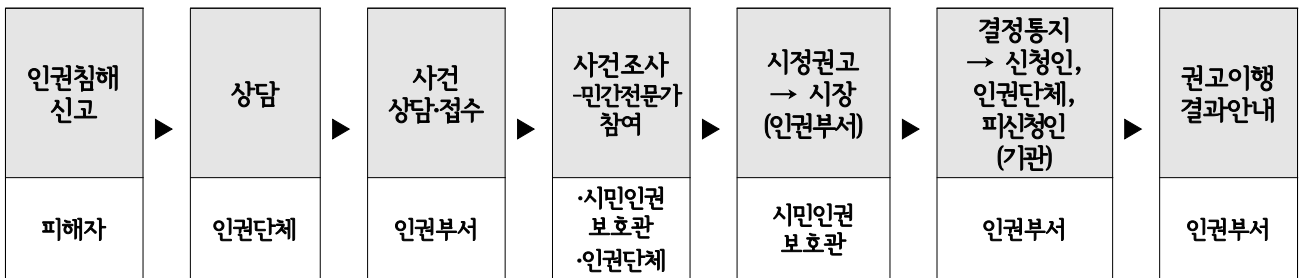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60	12	12	12	12	12	
	소요예산	195	35	40	40	40	4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김혜영					

## ⑥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 ○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설치 및 운영

- 인권단체에 상담·신고된 사건 중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가능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으로 인권단체와 협력체계 확보

#### 〈핫라인 운영절차〉



- 인권부서는 피해자와 인권단체(신청인)를 달리하여 사건 접수
- 필요시,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조사 참여 가능
- 결정통지 2개월경과 후 권고이행 결과를 인권단체 추가 안내

###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교육 및 현장상담 등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의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를 널리 알림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과 협업하여 대시민 현장상담 및 홍보 실시
- 공사·출연기관, 서울시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장애인·복지분야 종사자 대상 운영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횟수,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횟수	29	5	5	6	6	7	
	소요예산	5	1	1	1	1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팀		인권보호팀					
	담당자		지종대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4천명으로 총 인구 수(9백8십만)대비 4% 이상을 차지
  - 이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335,167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음

〈출처 : '16.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단위 : 명〉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335,167명)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		
404,037	85,878	33,139	37,178	80,712	98,260	40,775	28,095

- ⇒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함에 따라 체류유형별, 국적별 등 소통 창구를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생적 커뮤니티 지원 필요
-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꾸준히 증가, 여성 비율이 남성의 2배
  - 서울(6,957명)이 전국(28,742명)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거주,
  - 여성(4,671명)이 남성(2,286명)보다 2배 이상 많고, 3,4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음.
- ⇒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생적 커뮤니티 지원 필요.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으로 다양한 소통기회 제공 및 자생적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참여 정책추진으로 외국인주민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도모
  -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정치적 인권의 주체」로서 시의 다양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 사업 계획

**①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이주민 불편사항 청취 및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방법 및 사업기간

- 서울타운미팅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제안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개최 : 연2회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2회),분과회의(12회),기획회의(4회) 운영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 지원대상 선정 : 20여개 단체/105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 외국인근로자 및 주민 등 1,000여명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900	180	180	180	180	180	
서울타운미팅	횟수	10	2	2	2	2	2	
	소요예산	100	20	20	20	20	2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횟수	10	2	2	2	2	2	
	소요예산	25	5	5	5	5	5	
대표자회의	횟수	90	18	18	18	18	18	
	소요예산	100	20	20	20	20	20	
커뮤니티 행사	횟수	100	20	20	20	20	20	
	소요예산	525	105	105	105	105	105	
체육대회	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150	30	30	30	30	3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팀	글로벌센터 운영팀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주민 인권팀				
	담당자	신동훈	유소영	최선아 이재화 팜튀퀸화				

## ②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17년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7호」

### ○ 추진 방향

- 하나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불편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소통창구 운영
- 지역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 ○ 사업 개요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추진 : 연 12회 (월 1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업 워크숍 개최 : 연 1회 이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연 2회 이상
- 북한이탈주민 1박2일 남한가정 체험 추진 : 연 1회 이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한 ‘직장힐링캠프’ 추진 : 연 1회 이상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길라잡이행사	회	60	12	12	12	12	12	
	소요예산	15	3	3	3	3	3	
정착 워크숍	회	5	1	1	1	1	1	
	소요예산	15	3	3	3	3	3	
지역협의회	회	10	2	2	2	2	2	
	소요예산	50	10	10	10	10	10	
힐링캠프	회	5	1	1	1	1	1	
	소요예산	25	5	5	5	5	5	
남한가정체험	회	5	1	1	1	1	1	
	소요예산	10	2	2	2	2	2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팀		행정관리팀					
	담당자		박재련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요구 증대
- '17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 서울시 1, 자치구 20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청소년의 참여·의견 수렴 등을 통한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필요

## ○ 기대효과

- 청소년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능동적 참여 보장

 사업 계획

##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
- 추진방향
  - ▶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 사업내용

- 구성/임기 : 만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100여명 내외/1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 모니터링, 정책 제안 대회 개최
- 운영방법 : 정기회(분기별 1회)·임시회 및 분과회의, 희망총회(연1회) 개최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20	4	4	4	4	4	
	소요예산	305	61	61	61	61	6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권리팀					
	담당자		이지연					

##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어린이청소년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시 주요 재정분야 청소년 참여 확대
  - 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 시 전체 예산전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시 재정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역량강화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실시하여 서울시 재정 및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참여예산	추진목표	25명	5명	5명	5명	5명	5명	
	소요예산	-	-	-	-	-	-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팀		운영기획팀					
	담당자		이영희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
  - ☞ 보안성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필요
- 인터넷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접근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며 자원이 되고 있음
  -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보접근 능력 향상 필요
- '13년부터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자동 공개하며 방대해진 정보량으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 발생
  - ☞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정보공개 추진 필요
- 시민 관심정보, 주요시책사항, 생활정보에 대한 공개 욕구 증가
  -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정보공유 필요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 요 성

- 개인정보체계 효율화로 우리시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 강화

### ○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능력향상, 정보 공개 서비스 품질강화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시민만족도 향상

## □ 사업 계획

### 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 사업개요

##### - 추진방향

-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행정정보 공유 실현

#####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소통·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34호, '12.7.16)
-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종합 추진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431호, '12.8.23)

#### ○ 사업내용

##### 〈정보소통광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검색기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품질 개선
- 안전한 정보공개기반 마련 및 정보간 연계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 시민 관심정보,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주요 시책정보, 시민참여 사업 등 사전정보 지속적 확대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관리〉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 ※ 위원회 회의(187개 위원회), 사전공표 행정정보 확대(354종→378종)
-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노력
  - ※ 실무직원 및 간부교육실시(3,653명),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 발간(1500부) 기관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시행(연2회), 정보공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알권리 실현을 위한 구제절차 운영 →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
  - ※ 2017년 (14회 실시, 48건 심의)

####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추진목표 (공개건수,만건)	2,600	1,800	2,000	2,200	2,400	2,600	누계
	추진목표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95	
	소요예산	5,565	1,165	1,200	1,000	1,000	1,200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담당팀		정보소통혁신팀					
	담당자		서성호					

## ②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 ○ 사업개요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능력 향상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 ○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 실시

#### ① 집합정보화교육기관 교육운영비 보조(과기부 국·시비 매칭사업)

- 교육대상 :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고령인(55세이상)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협약후 강사비, 운영비를 지원
  - 장애인 22기관(21,904천원/기관), 고령인 7기관(6,298천원/기관)
- 교육목표
  - 교육 시간 : 장애인(800시간이상/기관), 고령인(300시간이상/기관)
  - 교육인원(총) : 장애인(13,000명/년), 고령인(3,000명/년)
- 소요예산 : 531,394천원 (국비:시비 50%:50%)

#### ②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활용 교육

- 교육대상 : 서울시민
- 추진방법 : 교육희망기관에 강사파견 현장교육 실시
- 교육과정 : 스마트기기 활용, IT트렌드, SNS교육 등
- 교육목표 : 10,000명/년

- 소요예산 : 80,000천원 (시비 전액)

③ 자치구 정보화교육

- 추진방법 : 자치구예산으로 교육 실시

※ 서울시 정보소외계층('16년말) : 약 311만명(장애인, 55세이상 고령인)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과기부 국·시비 매칭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 받은 자

- 보급수량 : 500대 ※ 예산에 따라 보급수량변동

- 지원품목 :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영상전화기 등 70~80종

- 추진방법 : 신청자 심사평가 후 선정자에 보조기기 가격의 80~90% 지원

- 소요예산 : 486,586천원 (국비:시비 50%:50%)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교육인원 (명)	680,500	135,500	135,800	136,100	136,400	136,700	
	소요예산	3,055	611	611	611	611	611	
	보급대수 (대)	2,500	500	500	500	500	500	
	소요예산	2,430	486	486	486	486	486	
데이터센터	담당팀		기획관리과					
	담당자		이나리					

③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사업개요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 및 자문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협업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목적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 또는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내부(2명) : 행정1부시장, 정보기획관
  - 외부(7명) : 시의원,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
- 개최시기 : 년1회(정기회) 또는 필요시 수시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직원 교육 실시

- 추진목적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취급자 등
- 교육일정 : 년4회(분기별 1회, 각 300명)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이해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및 대응조치 등

○ 개인정보 보호 침해 상담 및 대응센터 운영

- 추진목적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업무상 유출 등 사고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추가 유출 효과적 차단
- 대 상 : 직원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 운영시기 : 연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성체제〉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	----	---	------	------	------	------	------	-----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개인정보 보호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교육인원 (명)	7,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소요예산	40	8	8	8	8	8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담당팀		개인정보보호팀					
	담당자		여인선					

###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구성원의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전문가 부재로 사건 대응 미비
- 대학 내 인권 관련 교과목(이주민 등 소수자 관련 교과목) 부재

###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 및 전문가 필요
- 인권 관련 교과목의 개설로 교과목 이수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필요

#### ○ 기대효과

- 인권 교과목 이수를 통한 인권존중 확산 및 권익 향상 도모
- 인권 전문가(옴부즈맨) 도입으로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 □ 사업 계획

## ①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개설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17.12.27)
- 인권옴부즈맨 구성 및 자격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 관련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위 각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인권옴부즈맨 직무 및 권한
  -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관한 업무처리의 감독 및 의견제시
  -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

○ 사업내용

- 담당부서 : 교무과(교수, 조교, 대학원생), 학생과(학부생), 총무과(직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옴부즈맨 구성·운영	추진목표(명)	3	1	1	1	-	-	
	소요예산	-	-	-	-	-	-	
서울시립대 총무과	담당팀		총무팀					
	담당자		장경숙 이원배					

## ② 서울시립대 인권 교양과목 개설

○ 인권 관련 교양교과목 강좌개설 및 신설

- 인권, 평화의 가치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교과 운영
- 2018학년도 교과개편에 이주민 등 소수자 관련 교양교과 신설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추진목표 (개)	19	13	13	17	17	19	누계
	소요예산	284.3	46.8	46.8	61.2	61.1	68.4	
서울시립대 교무과	담당팀		교무팀					
	담당자		황혜원					